

통독과정연구 94 - III

3882 (340p)

528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



120p.
250

통독이후의 연구

통독연구

" 통독연구"

" 통독연구"

" 통독연구"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통독 4주년에 즈음하여 작성·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관으로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독간 교류협력 실태자료를 송부받고 있는 바, 관련자료 목록('90. 8~'94.7)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목 차

1.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2. 분단극복을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 4
3. 통독이후 제기된 주요 문제점 10
4. 통일독일 정부의 대처 방안 21
5. 평가 및 전망 43

※ 첨부자료 : 통독관련 연구자료 목록
('90.8 ~ '94.7)

1.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가. 우월한 서독체제의 강한 흡인력

- 의회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체제의 정치적인 우월성
-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모범적 복지국가 실현
- 더 많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서독사회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경

나. 동독 국가사회주의적 독재체제의 붕괴 및 동독주민의 서독편입 결정

- 동독 경제의 파탄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침체 계속
 -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상실
- 독재적 장기집권에 따른 정권의 경직화로 주변정세 변화에 적응 거부
 - 동구권의 탈공산화 및 개혁추세가 동독으로 파급
- 아래로부터 체제개혁 운동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자각과 대규모 이주사태
 - 보안기관(Stasi)을 통한 조직적 탄압에 대항하는 체제 저항세력 생성
 - 일반국민은 자유롭고 풍요한 서독체제를 동경, 자체개혁보다 서독편입 선호

다. 서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과 민족 동질성 유지 노력

- 기본법에 명시된 민족재통일 명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
 -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이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 ('63.7, 에콘 바)라는 명제에 따라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장기적인 질적 전환과정으로 파악
- 꾸준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대서독 접촉에 대한 동독지도부의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독체제가 내부에서 스스로 변하도록 유도
 - 동독지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분단으로 고통을 받는 동독주민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
 - 동독주민이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재는 인정하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강조
 - 국제법상 동독 승인은 거부

라.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로 동독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 헝가리 국경개방('89.9)과 고르바초프의 동독개혁 요구('89.10)가 평화혁명의 기폭제
- 소련의 무력개입 불원으로 평화혁명 성공

마. 서독의 기민한 외교역량 발휘 및 미국의 적극적인 동독 지원

- '89년 헝가리 및 체코 주재 서독대사관에 피신중인 동독 탈출민의 서독 인도를 위한 외교교섭에 성공, 동독 평화혁명을 촉발시킴.
- 전후 유럽에서 냉전을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독일통일이 새로운 유럽질서 형성에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 서독측은 독일통일을 범유럽 통합의 주도변수로 활용
- 서독측은 효과적인 통일외교(2+4 회담)를 전개, 주변국의 의구심 해소
 - 서독의 국력과 미국의 지원이 영·불·소의 반대를 사전 봉쇄
 - 통일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측의 양보 유도

2. 분단극복을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

가. 제1단계('45~'62) : '힘에 의한 우위 정책' (Politik der Staerke) 추진

-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을 겨냥하며, 연합국과 유엔 감시하의 전독 총선 실시 주장
 - 서구식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
 - 소련을 비롯한 동독 반대, 동독측은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연합안 제안
-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정책
 - 독일조약('52)으로 서방 3국으로부터 주권 회복
 - NATO 가입('55)으로 대동구 안보 강화
 - 서민당은 친서방 정책과 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보다 유화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함(NATO 가입 반대, EEC 회원국 반대)
-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 주장, 철저한 반공정책
 - 할슈타인 원칙('55)으로 동독의 외교적 고립정책 추구
 - 독일공산당(KPD)의 불법화('56)
- 향후 서독의 경제부흥과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 마련
 - 대동독 우위확보를 위한 체제역량 강화

- 정치적인 대동독 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리위주의 내독간 무역 실시 ('51 베를린 협정)
 -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무역 자유화
 - 내독무역은 내부거래로 간주, 관세 면제
 - 중앙은행간 청산계정 설치, 동독에 무이자 신용대부(Swing) 제공
 - 무역량은 150억 VE(80년대 년평균)로 서독은 동독의 제2무역상대국, 동독은 서독의 15위 무역상대국이었음.

나. 제2단계('63~'70) : 대동구 화해정책 추진

- 할슈타인 원칙을 수정, 우선 동구권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국교수립
 -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분단이 장기화되고, 동독이 안정화 됨에 따라 힘에 의한 강경책만으로는 주민들의 분단고통이 완화될 수 없다고 판단
- 양독간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시작
 - 동·서 베를린간 통과사증 협정('63)
- 동독내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비밀거래 시작('64)
 - 주로 체제저항 세력으로서 중형을 받은 자의 서독 인도조건으로 몸값을 지불(상당하는 물품 제공)
 - 3만 3천명 정치범 석방, 서독측에 인도
 - 25만명의 이산가족 재회
 - 서독측은 이에 대해 동독측에 총 35억 DM 지불

다. 제3단계('70~'74) : 양독간 협상을 통한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 제1차 정상회담('70.3), 제2차 정상회담('70.5)
 - 양측의 상호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났으나, 협상지속의 계기 마련

- 동·서독 통행협정 체결('72.5)
 - 동독측으로부터 인적교류 제한조치 완화 보장

※ 인적교류 현황

- 합법이주 또는 탈출을 통한 완전 거주이전('50~'92)
 - .. 동독에서 서독으로 : 375만
 - .. 서독에서 동독으로 : 47만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 200만(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 600만(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72.12)
 - 양독간의 기본관계 규율, 후속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장전
- 신문·방송사 특파원들의 상호 취재활동 허용('73.3)
 - 서독언론인 동독에 취재등록 및 상주('88년말 20명의 서독특파원, 8명의 동독특파원)
- 상주대표부 설치('74.5) : 양독간 분쟁해결기구, 협상창구 마련

라. 제4단계('74~'89) : 각 분야별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주민들간의 접촉 증대

○ 양독간 체육협정 체결('74.5)

- 정기적으로 체육경기 개최 합의, 경기일정 작성 교환('88년 141회 개최)

○ 양독간 보건협정 체결('74.6)

- 양측의 여행·방문자들이 긴급한 질병 발생시 상대편 지역에서 무료치료 제공

○ 양독간 우편·전화 협정 체결('76.3)

- 양독간 우편물 교환 및 전화통화 현황

- 소포 왕래('88) : 연간 3,600만 건
- 편지 왕래('88) : 연간 1억 9,500만 건
- 전화 회선('88) : 1,529선
- 전화 통화('88) : 연간 3,900만 통화

○ 양독간 청소년단체간 청소년교류 합의('82.9)

- 정부지원 수학여행 장려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88) : 연간 5,500명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88) : 연간 74,000명

○ 양독간 문화협정 체결('86.5)

- 도서전시회 개최, 상업적 음악공연 유치

· 연극 순회공연, 학술회의, TV 프로그램 교환방송, 소장 문화재 교환 전시

○ 양독 도시간 최초 자매결연('86.10)

-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상호방문을 통한 접촉 증대

· 62개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89말까지)

○ 양독간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87.9)

-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경험·기술정보 교환

○ 양독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87.9)

- 서독 과학·기술자 협회와 동독 과학 아카데미간 학문교환,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 자연과학, 공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합의 (27건)

마. 제5단계('89~'90) : 통일의 구체화

○ 콜 수상 10개 조항 통일방안 발표('89.11.28)

- 구체적 대동독 긴급 지원책 및 내독간 협력 강화 방안 발표

- 국가연합적 구조를 거쳐 서독식 연방통일국가를 형성해 가는 단계적 통일방안

- 동서독 정상회담 개최('89.12.19, 드레스덴)
 - 양독간 '조약공동체' 형성에 합의
- 동독에서의 첫 자유민주 총선거 실시('90.3.18)
 - 각 정당 민주세력 지원
-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조성('90.5.16)
 - 통독비용 보전 : 1,150억 DM
-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1차 국가조약 체결('90.5.18)
 - 동독경제의 DM 통화영역으로의 편입을 통한 급진적인 통합
 -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틀 마련
-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90.8.22)
 - 최초의 통독총선 방식 합의
- 동독의회, 서독에의 편입 결의('90.8.23)
 - 기본법 23조에 의한 서독에의 편입
- 통일조약(제2차 국가조약) 체결('90.8.31)
 - 모든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을 위한 최종 법적 구체화
- 독일 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2+4 조약) 서명(90.9.12)
 -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
- 90.10.3 독일 통일

3. 통독 이후 제기된 주요 문제점

가. 구동독지역 경제 붕괴

- 새로운 가격체계 및 생산방식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구동독 국내총생산(GDP)이 40% 이상 격감
 - 서방기업과 경쟁력있는 업종 거의 부재, 대부분 기존자본재가 노후화 되었거나 새로운 환경기준 적용으로 가동 불가, 높은 임금비용으로 투자의 성장기여도 미진
- COMECON 국가들의 경제침체로 구동독기업의 상품시장 상실
 - 구동독 대외교역량 중 67% 차지
 - 특히 구소련과의 교역량이 전체중 40% 차지
- 생산수단인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관계 미확정,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 미흡,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등으로 서방기업의 투자 부진
- 환경정화 대체비용, 막대한 구채무 등으로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지연
-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도산 증가 및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

- 노조측은 노동생산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서독수준으로의 인상을 목표로 한 과도한 임금인상협약 관철

※ 구 동 · 서독 지역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서독 지역			구 동독 지역			독일 전체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G N P(십억 DM)	2,631	2,775	2,832	195.4	246.9	292.5	2,826	3,022	3,125
경제성장률(%)	3.7	1.5	-2.0	-31.4	6.8	5.5	0.6	2.0	-1.5
취업인구(천명)	29,219	29,487	28,970	7,179	6,344	6,125	36,398	35,831	35,100
실업자(천명)	1,689	1,808	2,270	913	1,170	1,150	2,602	2,970	3,425
실업률(%)	5.5	5.8	7.4	10.9	14.9	16.0	6.7	7.7	8.9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4.1	4.0	12.8	9.9	8.5	4.8	4.7	4.5
임금비용상승(%)	-	4.4	3.0	-	9.4	2.5	-	5.4	3.5

* 독일경제연구소(DIW) 제공자료, 1993년은 추정치임.

* 연방정부는 '94년중 경제성장률을 서독지역 1.5~2%, 동독지역 8~10%, 독일전체 2.5%로 전망하고 있음.

나. 실업문제

0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장 초과고용인구(약 30%로 추정 : ifo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기업구조 전면개편에 따라 당분간 실업자 증가

- 구동독의 노후한 생산수단과 경쟁력 없는 제품 때문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불가피

- 서독 수준으로의 급속한 임금조정인상,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로 고용감축 불가피
 - '89년 15세 이상 주민의 86%가 취업, '93년 약 54%로 감소
 - 취업자수는 '89년 약 974만명에서 '93년 763만명(단축조업자, 고용 창출 조치 대상자 제외 578만명으로 감소)
- 악화되는 경제 및 고용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91년에 체결된 단계별 임금조정협약을 수정,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 1988년~1992년까지 서독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확대된 서독지역 고용시장 (취업자 8.4% 증가)이 경기침체로 위축, 실업자가 계속 증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

※ 통독전후 실업 현황

	실업자		단축조업자		실업률 (%)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통독 당시	160만	50만	3만	170만	6.5	6.1
통독 1년후	160만	100만	17만	120만	6.0	11.9
통독 2년후	180만	120만	23만	24만	6.0	13.9
'92년말	203만	110만	65만	23만	6.6	13.5
'93년 4월말	220만	111만	104만	23만	7.9	15.4
'93년 8월말	231만	117만	40만	14만	8.4	16.2
'94년 2월말	274만	130만	52만	14만	8.9	17.1
'94년 8월말	231만	117만	40만	15만	7.5	15.4

-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전문인력 이주
- 구동독에서는 실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당면 실업자 불안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실업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동독주민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대 중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단위 : %)

문 제	서 독				동 독			
	93.6	93.9	94.2	94.9	93.6	93.9	94.2	94.9
1. 실업	25	44	66	61	61	72	87	74
2. 망명/ 외국인	59	32	20	21	33	9	11	9
3. 물가/경제	12	14	13	10	15	17	9	7
4. 극우세력	20	13	10	12	16	9	7	6

* 동독주민들은 94년 9월 조사에서 안녕질서 21%, 통일로 인한 문제점 12%로 답함.

* 출처 : Politbarometar 여론조사 '93년 6월/9월, '94년 2월/9월

다. 구동독지역 신설주 재정난, 막대한 재정지원

- 경제재건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또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드러남.
- 동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이 지역의 담세력을 제고함으로써 통일비용 재원을 자체조달 한다는 계획은 통독후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로 차질

-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격감으로 재정난이 심화
 - 기업의 도산으로 법인세 세수 부진
 -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에 비해 낮고 실업자가 급증, 개인소득세 세수 부진
 - 국유재산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세수 부진
 - 세무행정체계 미확립으로 세원 포착 미흡
- 통일독일의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 · 서독 주민간 생활수준의 동질화
- 2,000년까지 10년동안 소요되는 통일비용은 약 2조 DM으로 추정
 - 구동독 부채 인수 등 직접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 3,700억 DM(18%)
 - 구동독 재건비용 : 1조 6,400억 DM(82%)
-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통독 이후 매년 연방정부 예산의 약 25%를 투입함.
- '90년 975억 DM, '91년 1,400억 DM, '92년 1,520억 DM, '93년 1,670억 DM, '94년 1,790억 DM, 95년 1,980억 DM(예정)
 - '93년 재정이전액 중 2/3를 연방정부예산에서 충당
 - 신설주가 연방에 납입한 조세 수입을 감한 순이전액은 '91년 1,070억 DM, '92년 1,150억 DM, '93년 1,280억 DM, '94년 1,370억 DM

※ 통일비용 추정 소요내역 별첨

서기 2,000년까지 통일비용 내역

(단위 : DM)

○ 통일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 경비	약 4,400억
- 신탁청 관리기업으로 인한 부담액	2,700억
- 동독의 대·내외 부채, 화폐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채무 차액 보전	1,000억
- 구동독 체제 희생자·복권 보상	187억
· 형사처벌자 보상 : 7억, 미반환 재산 보상 : 180억	
- 소련군 철수비용	125억
○ 동독재건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 비용 (과거 서독지역의 못사는 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	약 6,400억
- 환경정화시설 투자	2,000억
- 교통망 개선	1,270억
· 철도 480억, 도로 700억, 하운 80억, 공항 10억	
- 에너지산업 설비 현대화	1,000억
- 교육환경 격차 해소	700억
- 우편·통신분야 현대화	550억
- 주택분야 보수·유지, 현대화	500억
- 의료시설 확충	300억
-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	70억
* 구동독지역의 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적자분은 각 기금에서 각출금 요율 조정으로 지원	
○ 구동독지역 노동자(750만 기준) 노동생산성을 서독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 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약 1조
총 계	약 2조 800억

* 대사관 추정치(각종자료 참고 자체 작성)

라. 소유·재산권 처리 문제

○ 1945~49년 구소련 점령하에서 토지개혁에 의해 몰수된 재산은 통일조약에 의거 반환하지 않고 보상기로 함.

- 해당 재산 면적은 320만 ha로 구동독 토지의 1/3에 해당
- 소련정부는 그들의 점령권에 입각한 입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반대
-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몰수토지를 인수, 재산권과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동독주민을 고려하여 반환 반대
- 서독 협상자는 과거의 부당성이 반환 이후 제기될 또 다른 부당성과 상충,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원치 않았음.

○ 1949년 이후 구동독 정권하에서 무보상으로 몰수된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보상 선택도 가능)

-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자본주의 법치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법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당시 서독측 정책 담당자는 반환우선원칙이 추후에 구동독지역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서독거주 재산압류 소송자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 재산소유권 문제로 통일과정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

※ 보완조치로 동일조약 제41조 (2)항에 반환보다는 투자촉진과 고용확보를 우선시하는 특별법률규정 마련을 삽입

- 「보상보다는 반환 우선」 원칙에 의한 재산권 문제 처리가 구동독 경제재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신탁청의 재산 매각 사유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관계 불확정으로 기업들이 인수 기피
 - 원소유주들은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
 - 동독주민들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기피

마. 환경오염 제거 문제

- 구동독정부는 단기적 성장·할당량 달성에 급급, 환경문제 경시
- 경제의 실패 및 이로 인한 경제의 능률저하로 인해 환경오염 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려웠음.
- 환경 사회간접시설의 부재 또는 황폐화
 - 산업폐수의 95%가 처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된채로 방출
 - 주민의 36%만이 생물학 처리 또는 정수된 물 사용 가능(구서독 : 90%)

- 공공하수도중 60~70%가 구조물 손상
- 쓰레기 처리시설 미비
- o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고수한 결과, 선진 환경보호기술과 경험교환 부재, 유황 함유량이 높은 갈탄사용으로 환경오염 가중
 - 연간 500~600만톤(서독 100만톤)의 황산 및 주민수당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
- o 서독수준으로의 동독지역 환경정화시설 개선에 2,000억 DM 소요

바. 동·서독간 심리적 이질성 극복 문제

- o 통독이후 심리적 상호 이질감 상존('93.1 Allensbach 여론조사)
 - 서독주민의 44%('90.10월, 34%), 동독주민의 50%('90.10월, 38%)가 서로 이질감을 느낌.
- o '경쟁사회'와 '하향적 평준화 사회'간의 과도기적 갈등 심각
 - 동독주민의 시장경제체제, 개방적·다원적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 필요
 - 실직, 집세인상, 새로운 직장생활에서의 적응력 부족 등에 대한 불안 상존
 - 서독 위주의 급속한 통합추진으로 서독인의 우월감, 동독인의 열등감에서 오는 위화감 해소 문제 대두
 - 서독의 복잡한 법률, 규정 및 절차들에 직면, 열등의식과 함께 자신들이 대책없이 내버려졌다는 느낌을 갖게 됨.

- 동독주민의 86%가 2등 국민이란 차별의식을 느낌
(’91.2.4. Spiegel 여론조사)
- 동독주민의 60%가 ‘독일인’ 이라기 보다는 ‘동독인’ 으로 느낌
(’93.1. Allensbach 여론조사)

○ 조기퇴직 및 실업으로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 자기 비하·고뇌

사. 행정·사법·군사통합에 따른 문제

- Stasi 및 공산당 활동자, 반인권·반법치주의적 행위자, 전문지식
결핍자 등을 우선적으로 감축
 - 일정 경과기간 (50세 이하 6개월, 50세 이상 9개월) 동안 과거
봉급의 70%를 받으며 전직 준비, 그 이후는 자동 실직
 - 과거 200만 공공기관 종사자 중 140만 명만 계속 근무
- 동독지역 주정부 이하 지방행정 인력 부족
- 법조인력 부족으로 대국민 법률보호의 공백 문제 대두
 - 동독지역 판·검사 대부분이 과거 진력과 관련 재임용 심사 중
 - 일부 판·검사의 사퇴
- 독일연방군 감군(94년까지 37만)에 따른 사회복지, 새로운 직장선택 문제,
잔류 인민군의 통합연방군에 동화 문제 대두

아. 교육통합에 따른 문제

- 공산주의식 교육과 획일화된 통제교육을 자유민주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 교원·학생들의 가치관 혼란, 미흡한 교원 자질, 부적정한 교육과정 등
- 동·서독 지역간 교육제도 동일화 및 교육시설 격차해소 문제
- 구체제 관련 교사, 학술·연구분야 종사자 청산 진통
 - 교사들은 심리적 공백상태에 직면
- 교사들의 이념중심 교육 탈피 및 자질 향상

자. 구동독체제 과거청산 문제

- 구동독 치하 피해자 복권·보상 문제
 -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체제 피해자가 구동독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신청
-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문제
 - 사법체계 미확립으로 정치적 폭력사태에 대한 형사소추 지연
 - 구동독시절에 소추되지 않았던 가택침입, 우편비밀 침해, 무고죄 등 경미한 SED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93.10.3에 만료됨에 따라 시효 연장 문제 대두

4. 통일독일 정부의 대처 방안

가. 적극적인 구동독 경제재건 대책 추진

-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대응책’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마련 ('91. 3. 8)
 -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계, 노조 긴급 공동대응책 마련
 - '91~'92년 동안 총 244억을 투입, 사회간접시설 구축,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특별감가상각, 투자보조금 지급 등 투자유인 조치를 통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기업신설 적극 장려
 - 투자 초년도에 50%의 특별감가상각
 - 총 투자액의 23% 투자 보조금(지역 장려금으로 주정부가) 지급
 - 투자용 기계설비 등 실물자산 매입시 투자액의 8% 투자보조금

-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91. 3) 및 ‘제2차 재산법’ 개정('92. 7)으로 미해결재산 원소유자 반환원칙에 광범위한 예외 즉, 「반환보다는 투자 우선」 원칙을 인정,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 가능

- 동독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특례법 마련, 기존 건축법, 설계법 등에 규정된 계획 및 허가절차 간소화
- 1994년 말까지 연방정부 및 기업이 총 5,800억 DM을 신설주에 투자

(단위 : 십억 DM)

	'90 상반기	'91	'92	'93	'94	'95
총 액	34.4	92.1	126.4	150.0	177	580
- 설 비	13.2	41.8	46.6	50.3	56	208
- 건 설	21.2	50.3	79.8	99.7	121	372

* 출처 : 연방통계청 및 경제성(BMWi Ref. ID2)

0 국유기업 사유화 추진

- '90.6.17 통독 이전 신탁법에 의거 신탁청(Treuhandanstalt) 설립
- 신탁청 활동시한은 '94년 말, 그후 계약사항 준수여부 감독은 계속
 - 94년말까지 수입 680억 DM, 지출 3,430억 DM으로 2,750억 재정결손 예상
 - 1995년부터 신탁청 조직은 6개회사로 개편
 - 94.9월 연방의회 '신탁청 조사위원회', 여·야 별개의 최종보고서 제출
- '94년 6월말 현재 13,684개 대상 기업을 14,257개로 사유화
 - 이를 통해 146만명의 일자리 확보, 1,982억 DM의 투자 유치

0 1991년 3월 체결된 단계별 임금조정협약(Stufenabkommen) 수정

- 금속철강산업 사용자측의 임금협약의 일방적 파기 및 노조측의 파업('93.5) 끝에 서독지역 임금수준으로의 인상시한을 약 2년간 연장(금속 : '96.7.1까지, 철강 : '96.4.1까지)

- 기업파산 또는 대량해고 등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거 새로 조정된 임금인상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Haerte-Klausel) 추가 합의

나. 고용 및 사회보장 대책 마련

○ 고용촉진 대책 마련

- 구동독 경제여건이 취업에 유리해질 때까지 구조전환기 동안 고용창출조치 (ABM)는 중요한 역할 담당
 - '91년 평균 18만명, '91년 평균 39만명 등 '93년 3월까지 총 80만명이 혜택
-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건설 등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 조기발주
- '91~'92년간 약 550억 DM을 투입, 매년 180만 명의 취업 지원
- ABM 조치에 의한 지원이 '92년말 종료됨에 따라, 93.1부터 '동독지역 고용촉진 조치' (Arbeitsfoederung Ost)를 통해 고용 가능성 제공
 - '94.8 현재 9만 6천명이 혜택

○ 직업전환 및 연수 훈련 강화

- 유희 노동력은 많으나 장래가 없는 조선업, 광업, 전자산업, 화공업 분야 집중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적능개발 훈련 실시
- 직업교육자리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들의 자질 향상 도모
- 통독후 200만명 이상의 구동독인들이 직업전환 및 연수교육을 받음.

0 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동독 확대

- 통일조약에 의거 구동독지역에 의료, 연금, 실업, 상해보험제도를 구축
- 대등한 의료·보건 혜택 부여를 위해 연방, 주정부 의료보험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프로그램 마련
 - '95~2004년간 연간 14억 DM의 재원을 병원부문에 투자
- 1992. 1. 1부로 독일 전역에 동일한 연금법 적용으로 연금수혜연령, 유가족 후생복지 및 연금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
 - 63세부터(구동독시절 65세) 연금 수혜, 15만명의 미망인들이 월 270 DM의 유가족 연금 혜택
 - 신설주의 기준연금(평균소득자가 45년간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은 화폐통합시 672 DM(서독의 40.3%)에서 1993. 7. 1 부터 1,357 DM(서독의 73%)으로 2배 이상 인상
 - 1994. 1. 1부터 1,407 DM으로 서독의 75.3%에 도달
- '91. 1. 부로 연방사회부조법을 도입, 생계보장 및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 가능

○ 동·서독 주민간 소득 격차 해소

- 통독당시 구동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서독의 36.4% 수준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인상, '93년 평균임금은 2,745 DM으로 서독(4,035 DM)의 68%에 도달
- 공공노조 : '93.7부터 80%, 금속노조 : '94.12.1부터 80%

※ 동서독 주민의 가처분 소득 비교

(단위 : %)

연 도	91	92	93	94 (추정)
동독/서독	47.3	58.1	61.8	64.4

* 출처 : 연방통계청, ifo Digest 2/94

다.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90.5 연방과 서독 주정부는 신설주에 대한 재정 균형화 원칙 적용을 1994년까지 유보하는 대신 독일통일기금을 마련, 지원키로 합의
 - 독일통일기금 1,150억 DM 중 200억 DM은 연방예산절감을 통해, 나머지 950억 DM은 자본시장에서 조달, 연방과 서독주가 연간 21억 DM씩 부담, 향후 20년간에 걸쳐 상환
 - 당초 1,150억 DM에서 1,607억 DM으로 증액 지원 결정
 - 연평균 약 350억 DM 지원

※ 독일통일기금 증액 내역

(단위 : 십억 DM)

연 도	'90 하반기	'91	'92	'93	'94	총 액
당초 조성액	22	35	28	20	10	115
1차 수정액('92.3)	-	-	33.9	31.5	23.9	146.3
2차 수정액('93.5)	-	-	-	35.2	34.6	160.7

- 동 기금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15%를 연방정부에 할당, 구동독 재건사업에 직접 사용
 - 85%는 신설주에 할당, 이 중 40%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세금 및 사회보장 보험료율 인상
 - '91년 4월부터 실업보험료 2.5%, 연금보험료 1% 인상
 - '91년 7월부터 1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7.5% 추가 부과(연대부과금), 석유세, 담배세 인상
 - '9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4%에서 15%로 인상
 - '93년 7월부터 보험세 12%로 2% 인상
 - '95년부터 7.5% 연대부과금 재도입 예정

- 재정차입 및 적자재정 운용
 - 연방의 순재정차입액은 '89년 192억 DM에서 '94년 691억 DM으로 증가

※ 연방의 순재정차입(신규 부채)

(단위 : 십억 DM)

연 도	'89	'90	'91	'92	'93	'94	'95
차 입 액	19.2	56.7	52.0	38.6	66.2	69.1	69.0

※ 연도별 공공분야 순재정차입액 현황

(단위 : 십억 DM)

	91	92	93	94	95
연 방	52.0	38.6	66.2	69.1	69
구서독주	18.7	15.5	15.4	28	29.5
구동독주	11.4	16.2	20.0	22	9.5
구서독 자치단체	5.6	7.8	9	9	8
구동독 자치단체	6.2	5.9	5	3	2
유럽부흥기금	7.0	8.0	3.9	5.5	7
독일통일기금	31.0	23.6	13.4	3.5	-2
채무청산기금	-0.6	-0.5	0.1	0	—
구채무 변제기금	—	—	—	—	-0.5
연방철도 재산	—	—	—	—	—
계	131.3	115.1	133	146.5	129.5
GSP 대비 비율(%)	4.6	3.8	4.5	4.5	4

* 출처 : 연방의회 Drucksache 12/8227

- 공공부문(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 연방철도, 연방우편 등) 총부채액이 '95년에는 2조억 DM을 초과할 전망

※ 연도별 공공부문 총부채액

(단위: 10억 DM)

연 도	'91	'92	'93	'94	'95
총 액(10억 DM)	1,166	1,331.5	1,496.1	1,689.5	2,098.5
주민1인당 부채(DM)	14,500	16,400	18,400	20,800	25,800
대 GSP 비율(%)	41.0	43.7	48.2	52.5	62.5

* 출처 : 연방의회 Drucksache 12/8227(94.3.4)

0 정부 예산절감

- '93.7. 긴축 및 예산절감방안(Sparpaket) 마련
 - '94년 210억 DM, 그 이후 절감액을 증가('96년 250억)
 - 공무원봉급 동결, 국가보조금 감축
 -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자녀수당 등 사회보장비 지출삭감
('94년 160억DM 절감)
 - 탈세 및 조세 악용 방지

o 연대협약(Solidarpakt) 마련

- '94년말 독일통일기금 소진과 신탁청의 해체로 이를 대체할 장기적
재원조달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
- 통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995년부터의 통일비용 조달 및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 기업, 노조들 간에 “자기절제” 와
“연대의식” 을 통한 비용과 고통분담 방안

- '93. 3. 13 연방정부, 16개 주정부 및 여·야 정당대표들 간에 연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10개 원칙에 합의
 - '91. 7. 1부터 1년간 실시한 바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7.5% 추가 연대부과금을 '95. 1 재도입 : 매년 약 300억 DM 조달
 - 부과기간 설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은 계속 실시 입장이나, 사민당은 한시적 실시 주장
 - 사회보장혜택의 남용 방지 및 정부지출 삭감
 - '95년부터 신설주에 대한 주정부간 재정균형원칙의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과 서독주로부터 매년 558억 DM 이전
 - 신설주 생산품에 대한 판매촉진 및 연방철도개혁 추진
 - 주택분야 과거부채 해소 등을 위해 '구채무 변제기금' 설치
 - 1993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장키위해 20억 DM의 추가지원
 - 1993년 독일통일기금 37억 DM, '94년 107억 DM 추가 증액
- '93. 5. 27 연방상원은 연방재정건실화 방안(연대협약)실천을 위한 법률 (독일통일기금 해체와 관련 구동독부채해소, 신설주재건의 장기적 지원, 연방-주간의 재정균형화 도입 및 공공예산절감을 위한 조치 법률) 통과
 - 정부지출삭감 및 세제관련 법률 개정

- 연방·주간 재정균형화 및 구동독 부채 청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 .. 독일통일기금법 개정, 구채무 변제기금법 제정 등
 - .. '95년부터는 구채무 변제기금을 통해 구동독이 남긴 부채 약 4,000억 DM(신탁청 부채 2,300억, 채무청산기금 1,400억, 주택부문 부채 300억)을 연방정부가 인수, 상환

라. 소유·재산권 문제 처리

- o 연방미해결 재산관리청 산하 6개주 관리청과 201개 지방사무소(직원 5,300여명)에서 반환대상 재산의 소유권 확정 심사
 - '94.3월말 현재 124만명이 276만 건의 재산권 반환신청을 했으며, 그중 98만 7천 여건(35.7%) 해결('92.12월말 24.5%)
 - 소유권반환 청구 처리의 지연은 한정된 행정업무처리능력, 관계규정에 대한 담당공무원 및 피해당사자들의 이해부족, 규정자체의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에 기인
- o '94.9.23 연방의회, 과거 몰수재산 보상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EALG) 통과
 - '93.11.23 집권여당은 '93.3.31 연방각의가 통과시킨 정부초안을 대폭 수정
 - '94.9 연방 상하원 중재위를 거쳐 최종 법률안 통과
 - 총 보상액을 125억 DM에서 180억 DM으로 상향 조정

- 1945~49년간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126억 DM, 구동독 거주 과거 실향민에 대한 일시지원금 24억 DM, 구동독지역 나찌 희생자 보상금 20억 DM, 보상금을 신설주에 투자할 경우 최고 20%까지 투자보너스 지급 10억 DM 이내
- 연방예산 110억, 신탁청 재산 30억, 연방재정자산 25억, 재산을 반환받는 부담조정금 수혜자에 대한 과세 10억 DM, 나머지 5억은 물권 청산법에 의한 수입에서 총 180억 DM 조달
- 논란의 대상이던 반환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취소
- 보상금은 당사자에게 채권의 형태로 지급, 2004년부터 연 6%의 이자가 계산되며, 누진적으로 현금 상환
 - 2004년 이전 채권 매각자는 상당한 이자할인 감수
- 보상 대신 재산구입 선택 가능
 - 해당 토지에 지상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한 구동독 이용권자 및 96.1.1부터 신탁청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농업생산협동조합(LPG) 후속법인의 경우 최고 6,000 단위(Bodenpunkt)까지 1935년 기준시가의 1.5배로 구입 가능

- '45~'49년간 몰수당한 재산에 대한 조정청구권이 있는 원소유주는 채권보상 대신 조정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나머지 금액으로 임야를 1935년 기준시가의 3배가격으로 3,000 단위까지 구입 가능
 - 이 경우, 구동독지역 이용권자 및 차지인이 구입 우선권을 가지며, 구입 대상 부동산의 기존 임대계약은 향후 18년간 유효한 것으로 함.
- 몰수당한 개인 동산은 반환되나, 문화재 및 예술품은 20년간 박물관에 전시된 후 반환됨.

마.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교통, 통신

- 1990~93년간 총 382억 DM을 투자, 교통시설확충
 -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연방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신설주에 투입
 - 도로, 철도, 수로 및 공항 등을 보수 또는 확장함.
 - 여행 및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킴.
 - '91.4월 '독일통일 교통사업' 확정, 동·서독간 경제중심지 연결

※ 신설주 교통시설 확충·투자 현황

(단위 : 십억 DM)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97
연방지원액	20	92	138	132	580(예정)

- '93.12 독일철도 개혁방안 결정
 - '94.1.1부로 독일 연방철도와 제국철도를 3개의 철도주식회사와 1개의 특별재산으로 전환
- o 1990~97년간 총 600억DM을 투자, 통신망 고도화 사업(Telekom 2000) 추진
 - 1990.10까지 5%에 불과하던 1~2회 다이얼 시도후 통화연결확률이 1991년말 약 75%로 급속 개선
 - 동독내 디지털 오버레이망 건설
 - 통독후 전화회선이 두배이상 증가
 - '89년말 180만 선이던 전화회선이 '91년말 236만 선, '92년말 271만 선, '93년까지 약 400만선에 도달
 - 1997년 말까지 700만 회선에 달하여 가계 전화보급율이 서독지역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95%)
 - 구동독시절에는 신청후 20년을 기다려야 전화가 보급되었음.
 - 1997년 말까지 공중전화기 7만개('89년 22,000개), 팩스 40만 회선('89년 2,500회선), 이동전화기 50만 회선('89년 전혀 없음), 데이터 전송 9만 회선('89년 500 이하), 케이블 TV 500만 회선('89년 전혀 없음)
 - 공급 목표
 - 서독지역 Telekom 직원 3,000여명을 파견, 동독지역 동료들과 같이 근무

바.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 2,000년까지 동·서독지역 환경수준 평준화 목표 설정
- 환경보호 긴급조치, 시범프로젝트 및 오염정화 연구 등을 시행
 - 식수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 1993년 연방환경성 예산으로 1,860개 환경보호조치에 16억 DM 투입
 - 환경오염 해소 투자계획에 의거, 1991~93년간 28개 시범사업에 3.6억 DM 투자
-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향후 10~15년간 1,000억 DM의 민간자본을 유치
 - 수질정화시설, 하수처리장, 특수폐기물 적치장 건립
- 방사능 오염제거를 위해 '90년 이후 우라늄채광중단, 우라늄 채광에 따른 환경피해지역 1,500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탐사 실시(1996년 종결)
- 환경오염 잔재해소 재정 총당방안에 관해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간 행정협약 합의('92.10)
 - 환경기본법의 명시사항(오염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요비용을 연방(신탁청) 60 : 신설주 40으로 분담하되, 특히 오염 정도가 심한 화학단지과 갈탄공장에 대한 대형사업의 경우 75:25로 처리 비용 분담

- 이를 통해 환경오염 잔재 해소 비용부담 문제로 인한 투자장애 요인이 제거됨.

사. 체제전환에 따르는 동독주민의 의식구조·생활양식 재정비

-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정치교육 강화
 - 주요대상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노조간부 등
 - 정치교육기관 : 연방내무성,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각 정당 학술재단, 대학, 연구기관, 종교·사회단체
 -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는 93.4.1 신연방주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베를린 지부를 설치
 - 5개과에 20명 근무(이중 10명은 본 소재 본부 근무)
 - 동서독 주민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치교육 세미나 주관
 - 이 밖에 구동독 사회과목 교사 재연수, 홍보용 책자 배포, 벽보·달력 제작, 순회전시회 개최
- 동·서독 지역간 상호접촉과 이해 도모
 - 기존 도시간 자매결연을 이용 상호 친선·교제
- 각종 협회, 단체, 동호인 클럽 등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이해·기능 집단의 활성화

아. 능률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

- 신설주의 독자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인적, 물적, 조직적 지원
 - 서독지역 공무원을 동독지역에 파견·전보('94년 3월 현재 총 34,937명)
 - 연방정부 16,600명, 서독주 8,337명, 서독자치단체에서 10,000명 이상 파견
 - 직급별로 월 1,100~1,500 DM의 수당 지급
 - 연금산정시 동독 근무기간을 2배로 계상
 - 주거지와 근무지간의 주말 교통비 및 별거 수당(11시간 이상 부재일수 ×4 DM) 지급
 - 전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기 혜택 외에 이사비용 지급, 승진상의 특혜 부여
 - 퇴직 공무원들이 한시적으로 연장 근무
 - 연방정부가 신설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보조('92년 1억 6,800만 DM, '93년 2억 5천만 DM, '94년 2억 DM)
 - 기존 동독공무원에 대한 직업훈련, 자질향상 교육 실시

자. 법치국가적 사법체계 확립

-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연방주의 및 사회복지주의에 입각, 구동독지역의 사법체계를 신속히 재편
- 서독모델에 따른 사법조직 개편
 - 신설주 사법행정 재건을 위한 재건부(Aufbaustab) 설치 및 동서독 주간 자매결연
 -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의 폐지('90.10.3)
 - 동독 법무성을 해체, 각 주정부 산하 주 법무성으로 재편
 - 주 헌법재판소 신설
 - '92년 말까지 행정·재정·노동·사회법원 등 특별법원 설치를 통한 전문재판권의 분리
 - '93년까지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원조직체계(구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구축 완료
 - '92.6.26 사법동화법, '92.7.24 변호사 면허, 공증인 임명, 명예판사의 선임에 대한 심사법률, '91.1.11 사법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발효
- 사회주의체제 수호 및 불법정권 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구동독 법관 및 검사의 원칙적 배제

- 통일조약은 구동독법에 의해 획득한 판·감사 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
- 동독지역 판·검사 대부분의 과거 전력 심사
 - 각 주정부마다 판사 선출위원회 및 검사 선임위원회 설치
 - 구동독 판·검사중 1,889명이 심사를 받고, 그중 1,094명(58%)이 재임용됨.
 - 신연방주에 활동중인 법조인중 동독출신 판사와 검사가 각각 28%와 40%를 차지
- 서독지역 판·검사의 파견·전보
 - 93년중 판·검사, 행정직 2,300명, 사법보조관 700명, 기타 보조원 430명
- 판·검사 신규 임용, 퇴임 변호사의 재임용
- 재임용된 구동독 법관에 대해 민법·상법, 법원조직법 등 1년간 재교육 실시

차. 구동독 교육체계 확립

- o 구동독 교원들을 일단 전부 임용할 후 자격 심사 실시
 - 주요 보직 요원(교장, 학장 등)부터 심사
 - 교장 등 관리직 재임자는 대부분 교체, 구동독 교사들의 피해의식과 반발 우려 때문에 구동독지역 출신 임용

- 통일조약에 따라 '91. 6. 30까지 각주의 초중고교 제도정비 및 학교법 마련
 - 교직원, 학부모, 학생, 교육행정가들의 서독 교육제도 이해부족으로 3개주는 동·서독 질충제도 채택
 - 튀링엔주는 동독제도유지, 메클렌부르크-포어퍼메른주는 서독제도로 전환
 - 브란덴부르크주(10년)를 제외한 여타 주는 의무교육기간을 9년으로 확정
- 신설주 학교에 대한 교과서 공급, 시설 개·보수, 기자재 확충은 거의 완료단계
- 교육기간은 4개주가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Abitur)까지 12년제 고수
 - 서독지역의 13년 학제를 12년으로 축소하는 문제 적극 검토중
 - 동독에서 12년 수학후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96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
- '대학 및 연구를 위한 공동개혁방안' ('91. 7)에 의거, 대학교수 자질향상, 연구지원, 대학시설정비 등을 위해 24억 3천만 DM의 재원 마련
 - 현재 동독지역에는 15개 대학 및 21개 공립 전문대학, 12개 예술대학, 1개 교육대학이 있음.
- 각 주별로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 마련
 - 주민들에게 민주적 사회와 시장경제질서를 익히도록 하며, 새로운 직업 모색 가능성을 제공

카. 구체제 잔재 청산으로 화해 도모

- '92.6.17 연방하원은 '공산폭력 정권하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선언'을 의결
 -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희생이 4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와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함.
- 구동독 정권에 의한 피해자 복권·보상을 위한 '제1차 구동독 불법행위 청산법' 마련('92.11.4 발효)
 - 정치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금일 당 보상비 제상 및 판결과기 신청권 부여
- '93.2.10 연방각의에서 '제2차 구동독 불법행위 청산법' 의결, '94.3 연방하원 통과
 - 불법적인 행정행위, 특히 내독간 국경으로의 강제이주로 인한 재산손실 보상
 - 체제반대 등 정치적 이유로 입은 연금 등 직업상 피해보상 및 복권
- 정치적 이유로 폭력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 방침
 - 과거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RAF 테러조직 방조행위, 대서독 스파이활동 등에 대한 책임자 우선 형사소추

- 베를린 검찰 '정권적 범죄행위' 수사 임시전담반 편성
- 장벽 및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관련 구동독 지도자 재판
 - 호네커(구동독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원수) 구속, 건강악화로 재판진행 불가, '93.1.12석방(철레 체류중)
 - 전 수상 슈토프, 전국가보위부(Stasi)부장 말케 등의 재판은 건강상 이유로 중단
 - '93.9 케슬러 전 국방장관 등 3명에 유죄판결(징역 4년 6개월~7년 6개월)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
 - '93.12.6 전 Stasi 대서독 스파이 총책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도 국가모반 및 뇌물수수죄로 6년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남.
 - 탈출자 사살 관련 병사는 투옥된 반면, 명령을 내린 지도자들은 석방되어 법적 불공평성 문제 대두
-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 소멸시효 연장법 마련('93.9.29)
 - 구동독 시절에 소추되지 않았던 SED불법행위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서라도 과거를 청산, 법치국가적 기틀 마련 방침
 -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법행위의 시효는 '95년 말까지, 징역 1년~5년 정도의 범법행위는 '97년 말까지 연장

- 연장이유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구동독지도자재판 등 중대한 사건에 밀려 진행되지 못했고, 한편으로 Stasi 문서 처리작업 등을 통해 더 많은 범죄행위와 피해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임.

o Stasi 자료법 제정

- 정보사찰에 의한 피해자들 자신관련자료 열람 허용 및 조회권 보장
- 3,000명의 Stasi 자료담당청 직원 확보, 65만건의 자료열람 신청 중 25만건, 120만건의 공적임용 등과 관련된 심사신청중 55만건 처리

o 연방하원에 SED 독재체제 잔재청산 특별위원회(Enquete-Kommission) 설치('92.3.12)

- 구성 : 국회의원 32명, 관계전문가 11명 등 총 43명
- 임무 : 구동독 체제의 정치적·역사적 평가 및 청산작업
 - 구동독 억압체제에 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 체제반대자에 대한 탄압 및 자의적인 권력행사 사례 조사
 - 내독관계 및 국제적인 상황 평가
 - 반체제운동, '89년 평화혁명, 독일 통일 문제 조명
- '94.6.17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함.

5. 평가 및 전망

가. 개 관

- 통일후 4년이 지난 지금 통일당시의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요구되고 있어서 내적인 통일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통일독일이 극복하기에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독일통일과정은 각 분야별 내적통합과정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이란 두가지 중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힘든 일임.
 - 특히 동독의 경제적, 환경적 위기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판명되어 경제재건 및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 40년간 억압체제 아래서 왜곡된 동독주민의 소극적, 피동적 심리상태가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 독일정부는 통독당시의 낙관론적 전망 대신에 내적통합과정이 예상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동·서독 국민들에게 연대의식과 자기절제를 호소하고 있음.

- 구동독 주민들도 동·서독 생활수준의 신속한 균등화에 대한 낙관적 꿈에서 깨어나, 균등화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과제로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통독당시 구동독 주민의 51%가 5년 이내에 동·서독 생활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2년에는 20%, '93년에는 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독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님.
 - 급속한 통일추진이 문제점을 야기한 주요인 이라는 주장보다는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의 편입에 의한 통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동독주민이 약 70% 정도에 이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로 나타남.
 - 특히, 동독주민들의 절반이상이 오늘날 상황이 '89년 대변혁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함.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을 전후한('90) 구동독지역 실업현황 및 대책			400 - 45
신설5개주 환경정화문제			400 - 46
동·서독 노총의 통합에 따른 문제			400 - 47
통독후 통합 “연금법” 제정을 위한 해결과제			400 - 48
통합조약중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400 - 49
신설5개주 보건·의료체계 확립 문제			400 - 50
통독후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대책			400 - 51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서독 연금법의 동독 적용			400 - 52
동구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400 - 53
전환기에 처한 노동시장			400 - 54
동독의 단체협약 발전추이			400 - 55
연금개정 내용('92)			400 - 56
구동독지역 실업대책으로서의 신탁청의 사회복지 계획			400 - 57
구동독지역 여성실업자 고용창출 대책			400 - 58
구동독지역에의 아동·청소년 부조법의 도입			400 - 59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에의 의사법 도입			400 - 60
구동독기관 종사자들의 이전근무기간 인정 합의			400 - 61
“투자장애 제거법” 상의 구동독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설명서			400 - 62
사회부조(Sozialhilfe) : 신설연방주 주민에 대한 해설 책자			400 - 63
가족정책(동독지역 가정에 대한 급부)			400 - 64
동·서독 적십자사 통합 관련			400 - 65
과거 내독간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과 활동			400 - 66
구동독 환경오염 잔재 청산 책임 소재			400 - 67
통독후 구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노동자 이동현황			400 - 68
통독후 실업증가 원인과 대책			400 - 69

다. 경제분야

- 통독 이후 재정적자 증대,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92년 이후 서독지역의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94년들어 이들 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며, 또한 서독경제의 탄탄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됨.
- 통독 직후에는 구서독 수준으로의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3~4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콜 수상이 제시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세계경기침체와 이에 따르는 서독경기부진, 동구수출시장 상실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경제재건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구동독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92말 현재 구서독 수준의 34%, '93년 3/4분기 40.2%), 구동독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서독 수준으로의 경제재건은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구동독 주민들도 통일만 되면 곧 서독에서와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된다는 통일당시에 벅찬 기대에서 다소 그 시간표를 늦추고 있음.

※ 생활수준 평준화 시기에 대한 예상 여론조사

(단위 : %)

평준화 시기	1~4년	5~6년	7~10년	10년 이상
통독 1주년	23	45	26	6
통독 3주년	8	25	37	30

* 출처 : Die Zeit 지 통독 3주년 여론조사, '93. 10. 1

0 재정면에서는 통독 후 매년 연방예산의 1/4이상을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이전한다. 동. 서독지역의 실업자 증가로 인한 임금대체비용(실업수당 등) 증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격감이 가중, 공공분야 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으나, 정부가 각계 각층의 고통분담과 연대강화노력을 촉구하면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분야 포함 '94년 전체공공분야 순재정 차입액이 1,465억DM(GSP의 4.5%) 예상

- 재정차입을 통한 통일비용조달을 '후손들에 대한 부담 전가' 라고 비난하는 층도 있으나, 미래의 세대가 부담의 댓가로 현대화된 경제구조, 높은 생산성, 분업화 등 통일로 인한 투자의 경제적 열매를 향유하게 되는 장본인 이라면서 재정부담의 세대간 분산을 옹호하는 지식인 증가
- 공공부문 총부채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때 대 GDP 비율이 높은편은 아님.

※ 선진국 국가부채/GDP 비율(1994년도)

국 가	미 국	일 본	독 일	벨기에	프랑스	영 국
%	64.1	70.3	52.5	144.6	62.1	52.3

* 출처 : 연방의회 Drucksache 12/8227

- 경기부진을 이유로 건축재정운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유지 및 이자지급 부담률(총지출 중 이자지급이 '89년 11%에서 '94년 16%, '97년 23%로 증가예상) 등을 고려, 최근 건축재정 및 예산절감 조치를 단행
- o '94년 들어 동독의 경제는 계속 성장추세에, 서독경제는 침체를 벗어나고 있음.
 - 통일후 1년간 50%에 가까운 생산량 감소를 보이 동독경제는 '91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92년 6.8%, '93년 6%에 이어 '94년 상반기에는 8.9% 성장('94년 전체는 8~10% 예상)
 - 특히, 튀링겐주의 경우 '92년 12.8%, '93년 11.8% 경제성장으로 유럽 최고의 성장율을 기록
 - 동독 경제재건이 아직 서독지역으로부터의 재정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구조전환 과정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제조업 분야의 수주와 생산이 증가, 구동독 경제가 자체 성장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함.

- 구동독 제품이 서구수출시장 진출에는 미약하나, 자체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생산제품과 현대화된 생산라인으로 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 '94년 1월 구동독지역 전체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26% 증가
- '92년 중반 이래로 서독지역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으나, 전적으로 통일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 아니고(오히려 서독경기침체는 통일특수 덕분에 여타 선진국보다 2년 정도 늦게 시작 : 동독으로부터의 주문은 '91~'92년간 연평균 약 2,000억 DM에 달했음), 당시 모든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음.
 - 통독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이전지출액(매년 평균 1,500억 DM으로 연방정부 예산의 1/4) 마련을 위해 서독지역에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91.7부터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7.5% 연대부과금을 징수하고('91년 약 300억 DM의 구매력 감소), '93.1 부가가치세를 인상(14→15%)하고, 인플레이를 우려한 연방은행이 고금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증가가 둔화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서독경제의 침체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과('91~92년 호황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비용 상승 및 독일 마르크화 강제로 인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구조적 문제 등에 있음.

- '93년에 마이너스 성장(-1.9%)을 보였던 서독 GDP가 '9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보임.

※ 서독과 기타 선진국 경제성장을 비교('93.3 현재)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서독 (GDP)	4.0	4.9	3.6	0.9	-0.5	2.0
프랑스 (GNP)	4.1	2.3	0.8	1.8	1.5	2.5
이태리 (GNP)	3.1	2.0	1.4	1.0	0.0	1.5
영국 (GNP)	2.1	0.6	-2.4	-1.0	1.0	2.5
미국 (GNP)	2.5	0.8	-1.2	2.1	3.3	3.0
일본 (GDP)	4.8	5.2	4.5	2.0	2.3	3.5

* 1992~1994년은 추정치임.

* 출처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Information Service,
German Brief (1993, 4. 8)

- 0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고 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실업자가 많아서 통합과정상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난제로 남아 있음.
 - 실업문제는 동·서독 주민이 공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94.9 여론조사 : 서독주민 61%, 동독주민 74%)하고 있음.
 - 다만, 18세 이상 전일제 취업율에 있어서는 '93년 현재 구동독이 50%, 구서독이 44%로 동독이 오히려 양호한 형편임.

- 구동독 지역에서 '94년들어 경제가 성장하고 투자의 효과가 고용에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실업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실업률 : 93.8. 15.4% / 94.7. 15.1% / 94.8. 14.7%).

- o 과거 구서독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 간에 생활수준의 격차가 있었듯이 동·서독 지역간 과도기적인 상대적인 생활수준의 격차 상존은 불가피하나, 동독지역 경제는 러시아, 동구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전국면에 있음.
 - 이와 관련 동독지역 생활수준을 서독지역과 비교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같은 체제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동구국가들과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동독 및 동구국가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94년 예상치 : %)

	동 독	러 시 아	체 코	헝 가 리	루마니아	폴 란 드
GDP성장률	8~10	-10	3	1	0	4
물가상승률	3.4	700	10	20	200	30
실업률	15	—	6	12	12	15

* 출처 : ifo Digest 2/94. P.8

- 물가상승면에서도 여타 동구국가 보다는 훨씬 낮은데, 생계비가 전년대비 약 9%가 상승했으나, 이는 주로 연초의 집세인상때문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는 물가 상승률은 '94년 4% 이하로 예상되어 서독수준 정도로 안정화되는 추세임.

○ 절대다수의 동독주민들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은 통일후 크게 향상되었고, 40년간 거부당해 온 소비재 등 사고싶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됨.

- 동독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91년 서독수준의 47.3%에서 '94년 64.4%로 증가

※ 동독 산업노동자·사무원의 평균 총소득 향상 추이

시 기	총 소 득(DM)	'90.10 대비 증가율(%)	서독 노동자 대비(%)
'90.10	1,588	0	39.5
'91.10	2,086	31.4	49.2
'92.4	2,477	56.0	57.6
'92.10	2,711	70.7	60.6

* 출처 : 연방통계청, 신설주 경제사회현황(1993.7)

-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동독주민들은 구동독 전체적인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약 절반정도가 자신들 개인의 가계경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동독 전체의 경제 상황

(단위 : %)

	'92. 7	'92. 10	'93. 9	'94. 9
나쁘다	61	61	59	56
그저그렇다	37	35	39	38
좋다	3	3	2	6

* 출처 : '93. 9, '94. 9 Politbarometer 여론조사

※ 개인의 가계 경제 상황

(단위 : %)

	'92. 7	'92. 10	'93. 7	'94. 9
나쁘다	12	13	14	14
그저그렇다	56	49	56	44
좋다	31	37	36	42

* 출처 : '93. 9, 94. 9 Politbarometer 여론조사

* Spiegel지 94. 8. 15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좋다 54%, 그저그렇다 37%, 나쁘다 9%로 나타남.

-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독 가계의 가전제품 보유와 구매력은 통독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음. 특히, 비디오 카메라와 CD 플레이어 보유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 동·서독 가계의 가전제품 보유 현황

(%)

연 도	서 독				동 독			
	1991	1992	1993	증가율	1991	1992	1993	증가율
비디오	49	55	59	20	28	34	43	54
비디오카메라	9	12	13	44	2	5	8	300
C D(가정용)	25	32	39	56	7	12	18	157
C D(자동차용)	3	3	4	33	1	1	2	100
Hifi스테레오 (컴퍼넌트)	34	35	38	12	21	22	26	24
Hifi앰프, 터너	29	30	32	10	11	12	14	27
Hifi스피커	46	47	50	9	19	20	24	26
자동차스테레오	41	41	43	5	30	34	37	23
칼라 TV	78	78	78	0	74	76	78	5
칼라 TV (Portable)	29	29	28	-3	11	12	12	9

출처 : 알렌스바흐 여론조사('94. Nr. 6)

라. 사회. 심리분야

0 사회적 통일은 거의 달성되었으나,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통합은 내적통합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

- 연금제도, 보건제도, 실업보험제도 등 사회분야 통합은 순조롭게 추진되어 동·서독지역 평준화는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임.

-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인 갈등과 격차는 1~2세대 정도가 지나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여년간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인적왕래에도 불구하고 통독후 동·서독인들은 상대방의 체제와 주민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음.
- 구동독지역 주민의 90% 이상은 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다원화된 정치문화와 제도에 익숙해져야 하므로 아직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나, 통독후 4년간 새로운 생활조건에 비교적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대 이하의 구동독 청·소년층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과 교육의 습득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독주민들과 동화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대 이후 60대까지의 구동독 장년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양육되고 경력을 쌓으며, 그 체제내에서 직능을 인정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직능이 쓸모없게 된 가운데 실직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체제에의 동화에 애로가 있음.

통독관련 연구자료 목록

통독관련 연구자료 목록

〈정 치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의 국경개방 발표문	100 - 1
독·폴란드 국정보장에 대한 서독국회 결의안	100 - 2
콜수상이 7.17 소련방문에 앞서 행한 시정연설문	100 - 3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헌법개혁	100 - 4
//	- 행정제도 및 주택문제 100 - 5
//	- 정당제도 100 - 6
호네커 동독서기장 방독시(87.9.7-11) 프로그램 (남·북 정상회담 대비)	100 - 7
동독의 재편성을 위한 우선적 법적조치들(영문)	100 - 8
동독이 기 체결한 외국과의 협정처리문제 - 북한과 동독이 체결한 협정내용 중심 -	100 - 9
전동독수상 모드로우 서독방문시 프로그램(남·북 총리회담 대비)	100 - 10
독일의 대외정책 및 독일문제에 관한 기본원칙	100 - 11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89.11.9~90.3.18)	100 - 12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90.3.18~90.5.18)	100 - 13
양독수상의 조기총선 관련 성명(국문번역)	100 - 14
통독선거를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원문 및 번역문)	100 - 15
동·서독 선거제도 및 관계법령 등 자료	100 - 16(1)
제2차 국가조약안 전문(독어원문, 번역중)	100 - 16(2)
동독 국가안전부(Stasi)의 실체	100 - 16(3)
통독후 동독과 제3국과의 외교 및 영사관계 처리에 관한 서독 외무성의 회람(요약번역 및 원문)	100 - 17
통독관련 최종 조약(“2+4” 회담) (영문원본)	100 - 1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쏘간	우호·친선조약문	(영문번역)	100 - 19
통독관련	제반조약과 관련, 겐셔외상이 서독하원에서 행한 성명	(독어원문)	100 - 20
수상실	외교안보보좌관(TELTSCHIK)의 통일독일의 신국제질서하의 역할에 대한 기고문	(요약 영문번역)	100 - 21
겐셔	외상의 유엔총회 연설문 전문	(영문번역문, 독어원문)	100 - 22
연방대통령의	독일통일의 날 경축행사시 연설문	(독어원문)	100 - 23
콜수상이	독일통일에 즈음하여 전세계에 보낸 메세지	(독어원문)	100 - 24
통독후	첫 연방의회에서 콜 수상이 행한 정부 성명문	(독어원문, 영어요약문)	100 - 25
	“겐셔 외교의 비밀” (슈피겔지 10.1자 인터뷰기사	영어원문)	100 - 26
콜 수상이	통독후 처음 행한 유력일간지(Sueddeutsche Zeitung)와의 인터뷰 요약	(영어번역)	100 - 27
콜 수상이	유대인 신년에 즈음해 발표한 메세지		100 - 28
통독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외무성의 회람	(영문)	100 - 29
쏘련군	철수에 관한 독·쏘간 잠정협정	(영문번역)	100 - 30
쏘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절차에 관한 독·쏘간 조약	(영문번역)	100 - 31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부여에 관한 규정	(당관 영문번역)	100 - 32
독한협회와	진독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움 발표자료	(영문 및 국문요약)	100 - 33
주 서백림총영사	영사관할구역 연장 및 총영사에 대한 임시영사기능 부여에 관한 외무부 공한	(영문)	100 - 34
구동독	Stasi의 잔재	(영문논문)	100 - 35
동독지역의	민주정당 출현	(영문논문)	100 - 36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100 - 37
독·폴간	국경조약	(독어원문, 당관 영문번역)	100 - 38
겐셔	외무장관이 국경조약 서명시 행한 연설문	(당관 영문번역)	100 - 39
고르바초프	방독시 콜수상의 만찬사	(주재국 영문번역)	100 - 4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 독어원문)	100 - 41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	100 - 42
제1차 전독선거 관련자료	100 - 43
CSCE 파리헌장(독문)	100 - 44
동·서독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기와 적응전략(독어원문)	100 - 45
도시 자매결연 협정 예(동독의 Eisenach시와 서독의 Marburg시 간의 협정 원문 및 번역문)	100 - 46
신설 5개주 주정부의 각료 명단 및 약력(국문요약, 독어원문)	100 - 47
신설 5개주 개황(영문)	100 - 48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태 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에 관한 보고서 및 관련자료	100 - 49
사법·법률체계 통합에 관한 보고서	100 - 50
구동독 법관 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규정(독어원문)	100 - 51
독일 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현주소 : 반체제냐 개혁정책 추구냐?(독어원문)	100 - 52
통독의 외적인 측면에 관한 제규정(독어원문)	100 - 53
내독간 국경 탈출자에 대한 발표명령의 가별성(독어원문)	100 - 54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위원회(Clearingsstelle)의 구성과 임무	100 - 55
통합조약 이후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률들(독어원문)	100 - 56
제1차 국가조약시부터 통합조약 발효시까지 새로이 제정된 법령(독어원문)	100 - 57
통합조약의 헌법개정적 측면(독어원문)	100 - 58
통일독일의 외교정책 : 도전과 문제점 등(독어원문)	100 - 59
이전 동독지역에의 행정재판 제도의 도입(독어원문)	100 - 60
이전 동독지역 재산권의 상속 증명(독어원문)	100 - 61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독어원문)	100 - 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국가보위부(Mfs)의 거세작업과 그 잔재(독어원문)	100 - 63
독일 12대 국회 연정과트너간의 정부시택 합의문 (요약 및 독어원문)	100 - 64
통일독일의 법적인 제문제(독어원문)	100 - 65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 요약 및 관련법규 원문	100 - 66
동독주민의 국적인정의 법적인 문제	100 - 67
나토 외무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100 - 68
콜 수상의 향후 4년간 시정연설문(영문)	100 - 69
기본법과 독일의 통일(독어원문)	100 - 70
신설 5개주에 대한 과도기적 행정절차법(목차번역, 독어원문)	100 - 71
동독 공산당의 변신과정 : SED에서 PDS로(독어원문)	100 - 72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의의	100 - 73
신설 5개주에의 법관법의 도입	100 - 74
이전 동독지역 인사의 복권을 위한 형사처벌 판결 취소 문제	100 - 75
'45 이후 내독관계중 국가연합에 관한 제안들	100 - 76
과거 동독의 정치적 반대자들	100 - 77
신설 5개주의 사법체계 확립	100 - 78
동·서독지역별 분리 변호사 허가규정	100 - 79
구동독 공산당(SED)과 스탈린주의(Stalinismus)	100 - 80
신설5개주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100 - 81
통합조약 이후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제조약의 처리문제	100 - 82
호네커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으로의 탈출 관련자료	100 - 83
구동독 지역으로부터의 이주·피난민에게 제공한 서독측의 제반급부	100 - 84
Stasi 문서 열람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자료	100 - 85
신설 5개주의 사회법 체계 확립	100 - 86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주정부간의 행정협약	100 - 8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간 대 UN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	100 - 88
통독후 구동독지역 행정체제의 전환	100 - 89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감봉 및 해고관련 판례	100 - 90
신설5개주의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건단 설치	100 - 91
구동독지역에의 공무원법 도입	100 - 92
신설5개주 사법체계 수립현황	100 - 93
구동독 공산정권하의 희생자들의 복권문제 처리방침 (연방 법무장관 5.10 발표)	100 - 94
“2+4” 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100 - 95
동독 구체제 청산 관련 가해자 처벌 문제	100 - 96
구동독 잔류 공무원들의 재교육	100 - 97
통독이후 제정된 공무원 관계법령	100 - 98
변혁기의 구동독 원탁회의(Runder Tisch)의 활동	100 - 99
과거 소련과 동독간의 외교관계	100 - 100
독·폴간 우호협력조약	100 - 101
구동독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신청에 관한 설명서 및 양식	100 - 102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해고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100 - 103
통독이후 국가문서 처리	100 - 104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료	100 - 105
구동독 지방행정의 개편	100 - 106
통일독일의 국제적인 위상	100 - 107
통독에 따른 단체(Verein) 등록의 법적인 제문제	100 - 108
구동독 스파이 처벌 관련자료	100 - 109
구동독 정권하 피해자의 복권·보상문제 처리법(안) 요지	100 - 110
구동독 판·검사 출신 변호사 활동금지 방침	100 - 111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	100 - 11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지역(신설5개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과 문제점	100 - 113
지방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구서독지역의 구동독지역 행정지원	100 - 114
독일시연합회의 신설5개주 행정지원 프로그램	100 - 115
과거 양독간 국경 탈출자 총격살해 관련 과거청산문제	100 - 116
구동독 공무원 재임용 조건으로서 “헌법준수 서약 (Verfassungstreu)”의 의미	100 - 117
과거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에 관한 자료	100 - 118
구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문제	100 - 119
구동독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방 부처별 행정지원 내역	100 - 120
구동독의 경찰제도	100 - 121
구동독지역 신설연방주(작센주)의 경찰법	100 - 122
구동독지역 신설연방주(브란덴부르크주)의 경찰법	100 - 123
구동독의 경찰법	100 - 124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구동독지역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원	100 - 125
동·서독 국경개방을 전후한 구동독 피난 및 이주민 문제 실태 분석 결과	100 - 126
통독일년후 구동독 경제재건 및 행정·사법체계 구축현황 (Inter Nationes 제공 영문자료)	100 - 127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I)	100 - 128
구동독 Stasi 문서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제정 관련	100 - 129
통독을 전후한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	100 - 130
신설5개주의 법치주의 확립	100 - 131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1차) 관련자료	100 - 132
SED의 불법행위 청산에 관한 법(초안)	100 - 133
양독간 국경위원회 설치와 활동	100 - 134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2차) 관련자료	100 - 135
Stasi 문서처리에 관한 법	100 - 136
양독간 통행문제 관련위원회 설치 및 활동	100 - 13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호네커-슈미트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8	
모드로-콜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9	
과거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조사			100	-	140	
신설주의 지방자치행정체계 구축 현황			100	-	141	
동·서독 지역 행정분야 지도층 비교분석			100	-	142	
구동독 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신청서 양식 및 설명서			100	-	143	
Stasi 문서처리법에 관한 해설			100	-	144	
Stasi 문서처리법과 기본법상 언론의 자유			100	-	145	
과거 동·서독간 여행·방문 문제			100	-	146	
과거 동·서독 국경 탈출·이주문제			100	-	147	
국경지역내 동·서독간 협력사업			100	-	148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관련 문서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정			100	-	149	
통독을 전후한 서독에서의 동독 및 통일문제 연구			100	-	150	
구동독 최초의 자유총선('90.3.18) 분석			100	-	151	
통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 획득을 위한 절차			100	-	152	
통독을 위한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100	-	153	
신설주(구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상의 문제점			100	-	154	
구동독 공산당의 지배도구 Stasi			100	-	155	
통독총선 이후 동·서독에서의 정치적 견해의 변화			100	-	156	
동·서독 기본조약 후속 실천조치			100	-	157	
통독이후 정치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100	-	158	
과거 내독간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자 처벌과 형사상 소멸 시효문제			100	-	159	
SED 정권이 범한 반법치국가적 행위들의 법적 소멸시효문제			100	-	160	
구동독지역 출신 변호사 및 공증인 심사			100	-	161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의 내독간 문제			100	-	1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교훈(영문)	100 - 163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실상	100 - 164
최근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구축 현황('92. 4월말 현재)	100 - 165
내독관계 발전(영문) - 분단의 벽을 넘어 -	100 - 166
전후세대와 양독관계(영문)	100 - 167
정치범 석방 거래(Freikauf)	100 - 168
독일문제의 재조명(영문) - 통일에서 화해로 -	100 - 169
구동독 사법체계 현황	100 - 170
동독의 대서독정책 변화(영문)	100 - 171
호네커 신변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처리문제	100 - 172
구동독의 민사계약에 대한 서독의 책임한계	100 - 173
독일 정치교육의 과제 - 청소년 재통일	100 - 174
1980년대의 내독관계	100 - 175
구동독지역 “정의구현위원회”(Kommitte fuer Gerechtigkeit) 설립 관련 동향	100 - 176
통독과정에서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관한 법적 논쟁	100 - 177
정치범 인도를 위한 서독의 지출액	100 - 178
흡수통합 대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대와 우려 - 통독과정에서의 동독 -	100 - 179
연방하원 구동독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 결의문	100 - 180
Stasi 내부 반대파	100 - 181
통독을 위한 노력(영문자료)	100 - 182
동·서독간 간첩사건(기욤사건 중심) 처리	100 - 183
기욤 간첩사건과 브란트 수상 퇴임에 대한 동독측과 서독공산당(DKP)의 반응	100 - 184
동독간첩 기욤사건에 대한 서독언론의 반응	100 - 18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실태(영문자료)	100 - 186
구동독 과거청산 특별위원회 동향 보고	100 - 187
Stasi의 활동과 Stasi 자료 - 세미나 참가 출장 보고 -	100 - 188
동. 서독간 인권문제 논란(I)	100 - 189
형사처벌에 의한 구동독 피해자 복권. 보상법 개관	100 - 190
동. 서독간 인권문제 논란(II)	100 - 191
내독관계에 대한 동. 서독측 기관 관할권	100 - 192
내독관계에서 상주대표부 대표의 역할	100 - 193
동. 서독간 행정. 사법 공조(I)	100 - 194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문제	100 - 195
구동독 공산당 통치하 형사처벌의 정치적 악용	100 - 196
1989 동독혁명의 이론적 분석(영문자료)	100 - 197
서독 동방정책의 배경과 전략(영문자료)	100 - 198
구동독지역에서의 노조와 사민당의 조직정비와 역할	100 - 199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대가와 거래방식	100 - 200
정권적 범죄 및 통일 범죄의 유형	100 - 201
정권적 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황	100 - 202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II)	100 - 203
독일 통일문제에 관한 동. 서 진영의 입장	100 - 204
CSCE와 유럽장벽의 극복	100 - 205
동독시민의 평화. 인권운동	100 - 206
CSCE와 독일문제	100 - 207
CSCE와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제 문제	100 - 208
독일(통일) 정책적 관점에서 본 빈(Wien) CSCE 후속 회동	100 - 209
동독과 소련측에 의한 CSCE 최종선언내용 구체적 실천	100 - 21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측의 CSCE 최종선언 제3항목(Korb 3) 실천에 대한 평가	100 - 211
서독측으로부터 정보유입에 대한 동구권의 대응	100 - 212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I)	100 - 213
CSCE 과정에서 범주 III(Korb 3)의 실천	100 - 214
동. 서관계에서 CSCE를 통한 인도적인 문제해결의 의미	100 - 215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내독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인 제 수단	100 - 216
동독주민 서독방문시 여행안내	100 - 217
제2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법(안)	100 - 218
내독간 국경탈출자 사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	100 - 219
신설주 행정통합 문제	100 - 220
주 헌법재판소의 형사재판 개입 범위 - 호네커 재판 사례 -	100 - 221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I)	100 - 222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II)	100 - 223
구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	100 - 224
사법적 측면의 과거청산	100 - 225
구동독 판·검사에 대한 권력남용혐의	100 - 226
구동독 정권적 범죄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 Enquete-Kommission 공청회 발표논문 -	100 - 227
구동독 외교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 228
신설주 행정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현황 - 중간 결산 -	100 - 229
구동독 Stasi 연루자들에 대한 공직 배제 관련 논쟁	100 - 230
구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 (II)	100 - 231
고의적 법률왜곡으로 기소된 구동독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문	100 - 232
구동독 판사의 고의적 법률왜곡에 대한 형사상 책임문제	100 - 233
통독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	100 - 23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제2차 불법청산법’에 관한 논문	100 - 235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 대응	100 - 236
물권청산법(안) 해설	100 - 237
동독으로부터 여행·방문자에 대한 서독 정부의 재정 지원 조치	100 - 238
서독 상주대표부의 구체적인 활동과 임무	100 - 239
통독과 관련된 정치교육의 새로운 문제 - 주어진 자유에 대한 두려움 -	100 - 240
통독 이후 정치교육과 정치문화	100 - 241
서독 상주대표부의 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 사례	100 - 242
구동독 공산당 독재체제하의 탄압 및 주민들의 생활 - 과거청산특별위 회의록 -	100 - 243
신설주 지방행정 개혁 현황	100 - 244
분단시 동·서독 정당간 접촉·교류	100 - 245
시효법의 헌법상 배치 여부	100 - 246
구동독치하 판결로부터의 복권 문제 - 상법, 세법, 외환거래법 위반 -	100 - 247
통독 3년간 신설주 사법체계 확립 현황 - 브란덴부르크주를 중심으로 -	100 - 248
스타지 자료 처리 문제 - 논쟁, 협상, 입법 -	100 - 249
스타지 요원 및 비공식 협력자의 개념	100 - 250
통독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 - 설문조사 결과 -	100 - 251
통독 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 (I) - 학교에서의 통일 관련 정치교육 -	100 - 252
기본조약 체결과 4대국의 권리 및 책임	100 - 253
1970~89년 동·서독 및 소련 관계 - 과거청산특별위 공청회 발표 논문 -	100 - 254
통독 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 (II)	100 - 255
보상과 반환 간의 선택 문제	100 - 256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은 서독의 내독정책의 산물이었는가? (영문 자료)	100 - 257
전 동독스타지 대외경찰총국장 Wolf 재판	100 - 258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현황	100 - 259
독일 통일의 이론적 고찰 - 통합 이론과 민주화 이론 -	100 - 260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안	100 - 261
내독간 상속분 양도계약 해소	100 - 262
과거 청산을 통한 동질성 회복	100 - 263
1989년 동독 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 과정	100 - 264
서독 동방정책의 재조명	100 - 265
긴장완화정책은 체제변화를 위한 황금미끼였는가?	100 - 266
콜 정부의 동방정책	100 - 267
구동독 법률의 계속 적용 문제	100 - 268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관련 법률	100 - 269
구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 문제	100 - 270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평가	100 - 271
정주민과 이주민 동화 대책 및 수용 절차	100 - 272
장벽살해명령 관련 구동독 국방위 위원 재판 판결문	100 - 273
강제 이주 희생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	100 - 274
과거청산 특별위 활동 보고서에 대한 연방하원 심의 - 속기록 -	100 - 275

〈정치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합조약(제2차국가조약안) 번역문	(번역) 100 - 1
신설5개주 행정체계 확립	// 100 - 2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주석, 서신교환 포함)	// 100 - 3
탐욕스런 공산당의 잔재(동독 공산당과 그 제휴정당의 재산권 처리 문제)	// 100 - 4
폴수상의 첫 통독국회 시정연설	// 100 - 5
독일 공산당의 위기	// 100 - 6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 독어원본)	// 100 - 7
전 동독 국가보안부(Stasi)의 정체	// 100 - 8
전독총선에 관한 참고자료	// 100 - 9
동·서독간 도시간 자매결연	// 100 - 10
과거 동독지역 희생자들의 복권문제	// 100 - 11
내독관계성 공식해체 행사시 빌름스 장관 연설문	// 100 - 12
과거 동독방문자에 대한 의무환전제도	// 100 - 13
내독관계('70-'80)에 있어서의 돈과 정치	// 100 - 14
구동독 불법 공산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 100 - 15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연방-주정부 조직정비위원회(Clearingsstelle)의 임무	// 100 - 16
통일후 동·서독인들 간의 정치적 동화	// 100 - 17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 100 - 18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소위원회 중간보고서	// 100 - 19
UN에서의 동·서독 활동 결산	// 100 - 20
구동독 출신 법관과 법치주의 형성	// 100 - 21
SED(구동독 공산당)의 PDS로의 변신에 관한 개관	// 100 - 22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I)	// 100 - 23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II)	// 100 - 24

자	료	명	분류번호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와 법적인 제문제			(번역) 100 - 25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은 동독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는가 지연시켰는가? (1)			// 100 - 26
//	(2)		// 100 - 27
//	(3)		// 100 - 28
//	(4)		// 100 - 29
//	(5)		// 100 - 30
//	(6)		// 100 - 31
서독의 대동독 화해정책 재평가를 통한 만프레드 스톨페 사건의 조명			// 100 - 32
통독이후 독일정세 불안의 이유 - 랄프 다렌도르프 Die Zeit 지에 기고 -			// 100 - 33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 100 - 34
동독의 멸망원인(I)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 100 - 35
동독의 멸망원인(II)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 100 - 36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 교훈			// 100 - 37
서독에서의 자유와 통일에 관한 논쟁			// 100 - 38
호네커의 독일귀환 경위			// 100 - 39
호네커의 기소에 따른 법률적 난제			// 100 - 40
통독교훈과 한반도			// 100 - 4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			// 100 - 42
베를린장벽 탈출자 사살에 대한 법적 평가			// 100 - 43
사민당(SPD)와 구동독 공산당(SED)의 결탁			// 100 - 44
통독과정에서 CSCE의 의의			// 100 - 45
호네커와 동독 공산정권의 멸망에 관한 전 동독 국가보위부 (Stasi) 부장 Mielke의 슈피겔지 대담			// 100 - 46
통독2주년 관련 독일언론 반응(I)			// 100 - 4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바이체커 독일대통령 통독2주년 기념 연설문	(번역) 100 - 48
통독 2주년 콜 수상 기념사	// 100 - 49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Ⅱ) - 서로 과중한 요구는 자제해야 - (Handelsblatt 지)	// 100 - 50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Ⅲ) - 동·서독인들간의 내적갈등 - (FAZ 지)	// 100 - 51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Ⅳ) - 정치문화의 공동성장을 위한 과제 - (Frankfurter Rundschau지)	// 100 - 52
구동독 Stasi 국장의 대서독 국가반역행위 판결문	// 100 - 53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계법	// 100 - 54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Ⅰ)	// 100 - 55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Ⅱ)	// 100 - 56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Ⅲ)	// 100 - 57
제1차 내독간 국경에서 총격 살해 관련 구동독 국경수비 대원에 대한 판결문	// 100 - 58
구동독 지방선거(89.5.7)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문	// 100 - 59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Ⅳ)	// 100 - 60
호네커의 법정 진술(제6차 공판시)	// 100 - 61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Ⅴ)	// 100 - 62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개요 - 임무, 구조, 업무 -	// 100 - 63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활동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 100 - 64
에곤 바(Eogn Bahr)의 투칭 신교 아카데미 연설	// 100 - 65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Ⅵ)	// 100 - 66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내독관계에 미친 영향	// 100 - 67
통독후 동·서독 주민들의 공동성장 문제 - 슈미트 전 수상의 Die Zeit 지 기고문 -	// 100 - 68
통독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정당구조의 변천	// 100 - 6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간 '특수관계' 의 법적·정치적 의미	(번역) 100 - 70
독일 분단 시의 단일 국적 문제	// 100 - 71
미완성의 통일 - FAZ 지 사설 -	// 100 - 72
내독관계와 독일 통일에 대한 Kohl 수상과 Egon Bahr의 증언 (연방하원 과거청산특별위원회)	// 100 - 73
Herbert Wehner 사건 (대동독 접촉, 동방정책 추진시의 역할) 관련 논평 - 헬무트 슈미트의 Die Zeit지 기고문 -	// 100 - 74
구동독 행정인력 감축 문제	// 100 - 75
신연방주 재건 관련 연방부서 조직 현황	// 100 - 7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 탈출난민 일지	// 100 - 77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5) -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측면 -	// 100 - 78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 조치	// 100 - 7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7) -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	// 100 - 80
'89년 동독 탈출난민의 서독 수용 및 지원 - 연방 내무부 작성 -	// 100 - 81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9) - SED 불법행위 청산, Stasi 자료법 -	// 100 - 82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4) - 국가와 헌법 -	// 100 - 83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6) - 신연방주의 형성 -	// 100 - 84

〈군 사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국 외교·군사 상황보고	200 - 1
유탄포 장갑차 2000 현대화	200 - 2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 3~10)	200 - 3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 23-31)	200 - 4
주재국(서독) 정신전력학교 내용(목차번역, 원문)	200 - 5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 12-20)	200 - 6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 21-27)	200 - 7
연방군의 군복무 단축에 따른 대책(요약번역, 독어원문)	200 - 8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0. 10. 1-11)	200 - 9
구주안보협의력회의(CSCE) 신뢰구축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문 (독어원문)	200 - 10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10. 12-17)	200 - 11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동독군 탈퇴에 관한 합의 의정서 (독어원문)	200 - 12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3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4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11. 14-19)	200 - 15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6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 협정문(영문)	200 - 17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8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200 - 19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20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91. 2. 4~2. 15)	200 - 21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91. 2. 18~3. 8)	200 - 22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200 - 23
통독관련 군사동향(4. 22~5. 4)	2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주요군사동향	200 - 25
통독후 주요군사동향	200 - 26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	200 - 27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6. 18~6. 24)	200 - 28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6. 26~7. 1)	200 - 29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2~7. 8)	200 - 30
서구동맹(WEU) 장관회의 코뮤니케	200 - 31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9~ 7. 15)	200 - 32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16~ 7. 29)	200 - 33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30~ 8. 5)	200 - 34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8. 6~ 8. 12)	200 - 35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9~ 9. 16)	200 - 36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17~ 9. 23)	200 - 37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30~10. 7)	200 - 38
독일연방군의 운영계획(영문)	200 - 39
독일의 안보정책(영문)	200 - 40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8~10. 14)	200 - 41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15~10. 28)	200 - 42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29~11. 4)	200 - 43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1. 5~11. 11)	200 - 44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1. 12~11. 18)	200 - 45
나토 정상회담('91. 11. 7, 로마) 코뮤니케 : 영문	200 - 46(I)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1. 11. 19~11. 25)	200 - 46(II)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1. 11. 26~12. 2)	200 - 47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1~ 1. 9)	200 - 48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10~ 1. 16)	200 - 4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17~ 1. 24)		200 - 50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25~ 2. 3)		200 - 5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3. 9~3. 21)		200 - 52
//	('92. 3. 22~3. 29)		200 - 53
//	('92. 3. 30~4. 4)		200 - 54
//	('92. 4. 5~4. 12)		200 - 55
//	('92. 4. 14~4. 28)		200 - 56
//	('92. 4. 29~5. 5)		200 - 57
//	('92. 5. 6~5. 12)		200 - 58
//	('92. 5. 18~5. 24)		200 - 59
//	('92. 5. 25~5. 31)		200 - 60
//	('92. 6. 1~6. 7)		200 - 61
//	('92. 6. 8~6. 14)		200 - 62
//	('92. 6. 15~6. 21)		200 - 63
//	('92. 6. 22~6. 28)		200 - 64
//	('92. 6. 29~7. 5)		200 - 65
//	('92. 7. 6~7. 12)		200 - 66
//	('92. 7. 13~7. 19)		200 - 67
//	('92. 7. 20~7. 25)		200 - 68
//	('92. 7. 27~8. 2)		200 - 69
//	('92. 8. 3~8. 9)		200 - 70
//	('92. 8. 10~8. 16)		200 - 71
//	('92. 8. 24~8. 30)		200 - 72
//	('92. 8. 31~9. 6)		200 - 73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200 - 74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200 - 7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7~ 9. 13)	200 - 7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14~ 9. 20)	200 - 7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21~ 9. 27)	200 - 7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28~10. 4)	200 - 7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0. 5~10. 11)	200 - 8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0. 12~10. 18)	200 - 8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0. 19~10. 25)	200 - 8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0. 26~11. 1)	200 - 8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1. 2~11. 8)	200 - 8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1. 9~11. 15)	200 - 8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1. 16~11. 22)	200 - 8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1. 30~12. 6)	200 - 8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2. 7~12. 13)	200 - 8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12. 14~12. 20)	200 - 8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 4~ 1. 10)	200 - 9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 18~ 1. 24)	200 - 9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 25~ 1. 31)	200 - 9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1~ 2. 7)	200 - 9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8~ 2. 14)	200 - 9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15~ 2. 21)	200 - 9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22~ 2. 28)	200 - 9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1~ 3. 7)	200 - 9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8~ 3. 14)	200 - 9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15~ 3. 21)	200 - 9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22~ 3. 28)	200 - 10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29~ 4. 4)	200 - 10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4. 5~ 4. 11)		200 - 102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4. 12~ 4. 18)		200 - 103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4. 19~ 4. 25)		200 - 104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4. 26~ 5. 2)		200 - 105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5. 3~ 5. 9)		200 - 106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5. 10~ 5. 16)		200 - 107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5. 17~ 5. 23)		200 - 108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5. 24~ 5. 30)		200 - 109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5. 31~ 6. 6)		200 - 110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6. 7~ 6. 13)		200 - 111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6. 14~ 6. 20)		200 - 112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6. 21~ 6. 27)		200 - 113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6. 28~ 7. 4)		200 - 114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7. 5~ 7. 11)		200 - 115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7. 12~ 7. 18)		200 - 116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7. 19~ 7. 25)		200 - 117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7. 26~ 8. 1)		200 - 118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8. 2~ 8. 8)		200 - 119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8. 9~ 8. 15)		200 - 120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8. 30~ 9. 5)		200 - 121
동·서독간 군사	안보분야 교류·협력		200 - 122
구동독	군수산업체의 구조전환과정		200 - 123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9. 6~ 9. 12)		200 - 124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9. 13~ 9. 19)		200 - 125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9. 20~ 9. 26)		200 - 126
주재(주변)국 군사	안보 동향('93. 9. 27~ 10. 3)		200 - 12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0. 4~10. 10)	200 - 12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0. 11~10. 17)	200 - 12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0. 18~10. 24)	200 - 13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0. 25~10. 31)	200 - 13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 8~11. 14)	200 - 13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 15~11. 21)	200 - 13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 22~11. 28)	200 - 13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 29~12. 5)	200 - 13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2. 13~12. 19)	200 - 13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2. 27~'94. 1. 9)	200 - 13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 10~ 1. 16)	200 - 13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 17~ 1. 23)	200 - 13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 31~ 2. 6)	200 - 14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2. 7~ 2. 13)	200 - 141

〈군사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쏘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에 관한 독·쏘간 조약	(번역) 200 - 1
쏘련군 주둔에 관한 동독·쏘간 협정	// 200 - 2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200 - 3
통일독일군의 미래	// 200 - 4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 200 - 5
독일의 군사통합	// 200 - 6
독일연방 국방성의 통독1주년 독일연방군 현황보고	// 200 - 7
통독2주년 기념 국방장관 연설문 - 통독 2년간의 성과 -	// 200 - 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0) -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 -	// 200 - 9

〈경 제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화폐, 사회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	300 - 1
독일통일 공채발행계약과 연방 및 주정부예산 절감계획	300 - 2
동서독 공업규격 통합	300 - 3
동서독 경제통합이후 동독지역에 도입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300 - 4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경제제도 개혁	300 - 5
// - 경제적 문제점 및 전망	300 - 6
통합 공업규격(DIN)의 목록(영문판)	300 - 7
양독간 경제관계 진전상황 요약(영문, 89. 11. 9-90. 3. 18)	300 - 8
제1차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화폐통합 관련)	300 - 9
// (경제통합관련)	300 - 10
동독내에 주거지, 본점 또는 지점이 없는자의 영업행위 또는 자유업의 허가에 관한법	300 - 11
동독내 환전 자산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300 - 12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리에 관한법	300 - 13
통독비용	300 - 14
동독에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해설책자(독문)	300 - 15
재무성장관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설문(독문)	300 - 16
경제통합이후 변동상황(영문요약, 독문)	300 - 17
인민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독문, 목차번역)	300 - 18
동독에 대한 투자저해요소(독문, 국문요약)	300 - 19
서독경제 활성화(독문, 국문요약)	300 - 20
동독의 물가상승(독문, 국문요약)	300 - 21
동독농민 농업정책에 반발(독문, 국문요약)	300 - 22
동독의 재정원칙에 관한 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관세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4	
동독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원문, 목차번역)			300	-	25	
폴수상 세금인상 반대(8.27 계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6	
통독예산 200억 마르크(8.28 헤랄드 트리뷴지 기사번역)			300	-	27	
연방예산 4,000억 DM 이상으로 상승 (8.29 계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8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 이후 기존통계의 조정 및 향후 통계 작성상의 문제(국문번역, 원문)			300	-	29	
무역·자본 및 지불거래에 관한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30	
동독의 새로운 조세제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300	-	31	
30년간의 내독교역 - 경제·정치적 의미 - (독어원본)			300	-	32	
내독교역의 전망(영어원본)			300	-	33	
동독 통계법(목차번역, 독어원본)			300	-	34	
내독교역 관련 법령집(독어원본)			300	-	35	
서독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통독비용 관련, 독어원문)			300	-	36	
동독지역 몰수재산권 반환신청에 관한 해설자료 및 신청서 양식			300	-	37	
5대 경제연구소, 신탁청의 구조적 오류 및 업무과중 비판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8	
독일 체신장관, 동독지역 전화통신 개선계획 관련 동향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9	
독·쏘간 경제·산업·과학기술분야 협력조약(당관 영문번역)			300	-	40	
동독지역에의 사회적시장경제 도입(영문, '89. 11. 9-'90. 4. 20까지 경제정책)			300	-	41	
통합조약과 임대차법(독어원문)			300	-	42	
미해결 재산권의 법적인 측면(독어원문)			300	-	43	
이전 동독지역의 EC 단일시장 경제권으로의 편입·통합(독어원문)			300	-	44	
쏘련 점령하 구동독이 몰수한 재산의 미반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300	-	4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	독	간	무	역	과	EC	
단일시장(독어원문)							
300	-	46					
반	법	치	국	가	적	형	
사처벌에 의해 몰수된 재산권의 반환신청 설명서							
300	-	47					
및	신	청	양	식			
재	산	권	반	환	신	청	
에 관한 지방행정기관 업무처리 지침(독어원문)							
300	-	48					
이	전	몰	수	재	산	권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심리에서 밝힌 법무장관의							
300	-	49					
의	견						
독	일	야	당	인	사	민	
당(SPD)의 동독지역 재건계획							
300	-	50					
독	일	상	공	회	의	소	
조사 구동독지역 경제현황 및 전망							
300	-	51					
신	설	5	개	주	교	통	
분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처리							
300	-	52					
간	소	화					
구	동	독	지	역	지	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							
300	-	53					
신	탁	청	과	주	정	부	
및 연방정부 공동협력안							
300	-	54					
투	자	촉	진	을	위	한	
미해결 재산권 처리문제 재조정							
300	-	55					
기	업	사	유	화	장	애	
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							
300	-	56					
구	동	독	지	역	주	택	
임대료 인상 관련자료							
300	-	57					
과	거	동	독	기	업	의	
독일마크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법							
300	-	58					
개	관						
구	동	독	소	유	행	정	
· 재정재산 재분류 절차와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							
300	-	59					
신	설	5	개	주	에	대	
한 농업지원							
300	-	60					
통	독	에	즈	음	한	독	
일 전경련(BDI)의 활동							
300	-	61					
구	동	독	지	역	의	협	
동조합체제(Genossenschaft) 전환 가능성							
300	-	62					
구	동	독	지	역	우	편	
· 통신분야 확충							
300	-	63					
신	설	5	개	주	에	대	
한 국가적 투자촉진 대책 및 재정지원 현황							
300	-	64					
이	전	몰	수	재	산	미	
반환을 위한 투자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및 양식							
300	-	65					
구	동	독	지	역	주	거	
현대화를 위한 지원조치							
300	-	66					
“	기	업	사	유	화	에	
대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설명자료							
300	-	67					
최	근	신	탁	청	활	동	
동향							
300	-	68					
신	설	5	개	주	에	대	
한 경제지원							
300	-	6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최근 활동동향	300 - 70
통독이후 관세행정의 개편	300 - 71
쏘련 점령하 구동독지역 몰수재산 미반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원)문	300 - 72
통일독일의 재정현황과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300 - 73
신탁청 관리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 및 관계법령	300 - 74
신탁청 관리 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에 따른 신청서(양식) 및 설명자료	300 - 75
통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00 - 76
신설 5개주의 등기부 열람 문제	300 - 77
구동독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새로운 농업구조 조정법 제정	300 - 78
하원 신탁청 소위원회 구성과 임무	300 - 79
신설 5개주에 대한 EC의 지원	300 - 80
신탁청 관리재산중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재산	300 - 81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구동독 경제학자의 제언	300 - 82
구동독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처리문제	300 - 83
구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처리문제	300 - 84
구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원소유권자에게의 반환문제	300 - 85
신설5개주에서의 영업활동(영문책자)	300 - 86
신설5개주 농업재건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	300 - 87
구동독의 대외채권과 채무의 처리	300 - 88
독일통일과 연구·과학·기술정책	300 - 89
구동독지역(신설주)의 연구체계 재편	300 - 90
구동독지역(신설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책	300 - 91
'90년대 구동독지역 투자전망(영문판 신탁청 제공자료)	300 - 92
구동독 과학분야 청산을 위한 “청산 및 조정위원회”(KAI) 설치	300 - 93
구동독 경제의 붕괴 원인	300 - 9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지역	농촌	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	300 - 95	
구동독지역	발전	현황			300 - 96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과학·기술·연구	중점분야		300 - 97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전략	관련	논의	300 - 98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91	추계	경제전망	300 - 99	보고서
구동독의	농업구조	재편			300 - 100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용과정(제3차	300 - 101	보고서)
통독의	경제적	측면(영문자료)			300 - 102	
“경제5현”	의	'91~'92(동독 포함)	경제평가	보고서(요약분)	300 - 103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0월호)			300 - 104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1월호)			300 - 105	
신설5개주에	계속적용되는	구동독	농업관계	법령	300 - 106	
구동독지역(신설연방주)에	대한	투자	: 경제성	발행	300 - 107	영문책자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1월호)		300 - 108	
통독이후	교통망	통합문제(영문자료)			300 - 109	
신설주에	있어서	기업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300 - 110	실질적
통독이후	산업재산권	관련	법안	및	300 - 111	설명자료
양독간	경제·화폐·사회통합	관련	참고문헌	목록	300 - 112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통독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관한	참고문헌	300 - 113	목록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2년 2월호)			300 - 114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신탁청의	역할		300 - 115	
MBO 방식에	의한	신탁청	기업매각	계약서	300 - 116	전본
구동독	국유기업	반환제도	와	관련	300 - 117	규정
구동구권(동독 포함)	기업의	구조개편	과	사유화	300 - 118	성공의
				조건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야당인	사민당의	300 - 119	제안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기업 사유화의 실질적인 장애요소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20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121
“기업 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2차 개정시안(정부측 설명자료)	300 - 122
통독이후 상속권의 제문제	300 - 123
통일조약상의 가족법(해설)	300 - 124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 지원조치(요약)	300 - 125
구동독지역 주택분야 재산권 문제 처리 신속화에 대한 지침 (연방 건설성)	300 - 126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 경영적 적응과정(제5차 보고서)	300 - 127
구동독 대내외 부채청산을 위한 기관설립과 재정조치들	300 - 128
임금인상 투쟁이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통독비용에 미치는 영향	300 - 129
구동독으로부터 승계한 재정부담 청산과 추정 소요액	300 - 130
Stasi 보유 구동독 부동산 재산 처리상의 문제점	300 - 131
제2차 구동독 재산법 개정(초안) 해설	300 - 132
동·서독간 교역 및 경제협력	300 - 133
동·서독 교역과 정치적 배경	300 - 134
신탁관리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방안	300 - 135
통독이후 새로운 독일의 경제정책	300 - 136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1년말 현재)	300 - 137
연방 미해결 재산권 처리	300 - 138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	300 - 139
구동독 은행 시스템 통합 - 독일 연방은행 보고서 -	300 - 140
독일통일이후 재정현황과 재정상의 문제점	300 - 141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경제협력사업의 유형들	300 - 142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지불 및 신용거래	300 - 14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5월호)	300 - 144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 -	300 - 145
통독이후 구동독지역내 여성실업자 증가원인과 추세	300 - 146
신설주(구동독지역)에 설립된 고용촉진 및 자질향상회사 실태	300 - 147
숫자로 본 경제통합 현황	300 - 148
구동독지역 최대 투자장애요인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49
구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전환과 재건	300 - 150
구동독지역 기업 경영인 현황	300 - 151
구동독지역 임금구조 변동추세	300 - 152
구동독지역 최근('92.3월말 현재) 노동시장 현황	300 - 153
화폐통합 :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 정치적 결정	300 - 154
환경통합의 길 - 환경협력과 환경정책 요건 -	300 - 155
신설주 경제재건을 위한 심리적 조건	300 - 156
자영업과 구동독 경기부양	300 - 157
신설5개주의 재정상 문제점	300 - 158
구동독지역 주택 사유화 절차(해설 및 체크리스트)	300 - 159
동·서독간 경제교류 현황(영문)	300 - 160
동·서독간 거래수지(영문)	300 - 161
신용청산기금 현황 - 독일 재무성 보고서 -	300 - 162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추진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	300 - 163
내독간 자동차 교통량	300 - 164
동·서독 경제관계(영문)	300 - 165
통일독일에서의 상업적 권리보호의 표준화	300 - 166
구동독지역의 산업생산요소	300 - 16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2년 3월말 현재)	300 - 168
제2차 재산법 개정(안)	300 - 169
신속한 사유화의 문제점 - 신탁청 활동에 대한 비판 -	300 - 170
신설주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300 - 17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300 - 172
구동독지역의 임금정책(영문)	300 - 173
독일 경제개관 및 전망(영문자료)	300 - 174
'92/'93 재정현황과 통독이후 재정정책상 문제점	300 - 175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7월호)	300 - 176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적응문제(영문자료)	300 - 177
통독과 환율정책 및 EMS(영문자료)	300 - 178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6차 보고서)	300 - 179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7) -	300 - 18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8) -	300 - 181
투자우선법 원문	300 - 182
투자우선법 해설자료	300 - 183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추계 경기전망 보고서	300 - 184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9/10월호)	300 - 185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2년 9월말 현재)	300 - 186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	300 - 187
구동독지역 체제 이행 과정상의 제 문제	300 - 188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2.11) -	300 - 189
통일독일 93년 경제전망(영문자료)	300 - 190
신설주 교통분야 재건설태	300 - 19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 재정 건설화 방안 해설(영문자료)	300 - 192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개편 현황(영문자료)	300 - 193
접경지역 지원법(Zonenrandfoerderungsgesetz)	300 - 194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300 - 195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92년 결산보고	300 - 196
최근 독일경제 동향 - ’92년 4/4분기 -	300 - 197
미해결 재산권 처리의 의의와 목적	300 - 198
구동독지역 가계소득의 분포와 만족도	300 - 199
최근 동독경제 현황(영문자료)	300 - 200
사민당 연대협약(안) - 독일 경기부양, 동독재건, 환경개선 및 사회정의 -	300 - 20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3.1) -	300 - 202
내독관계에서 양독주민들의 상대편 지역에 은행구좌 설치	300 - 203
독일 경제현황에 관한 콜 수상 연설문(영문자료)	300 - 204
구동독 산업 정비와 재건을 위한 신탁청의 책임	300 - 205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	300 - 206
농업구조조정법에 의거한 농장주들의 권리	300 - 207
통독으로 인한 국가부채	300 - 208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3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0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10
’93 춘계 독일 경제 현황 (영문 자료)	300 - 21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8차 보고서)	300 - 212
신설주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현황	300 - 213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안) 해설	300 - 214
내독간 신용대부 (Kredit) 거래와 그 정치적·경제적 의미 - ’83, ’84의 대규모 대 동독 은행차관을 중심으로 -	300 - 21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의 임금 및 고용현황 - '93년 1/4분기 -	300 - 216
신설주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300 - 217
구동독 계획경제의 기술혁신력 부재: 동독 체제의 근본적인 붕괴 원인	300 - 218
몰수재산 관련 보상법 정부(안)에 대한 논평	300 - 21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20
통독후 구조적응 과정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	300 - 221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 ('93년 6월말 현재)	300 - 222
통일독일의 재정 정책 및 운용 계획 ('93 ~ '97)	300 - 223
독일 경제 현황 - '93년 2/4분기 -	300 - 224
독일의 산업입지 확보 방안 - 정부 보고서 (요약) -	300 - 225
'93/94 공공분야 재정 현황	300 - 226
신탁청의 사유화 전략 - 실적과 문제 (영문 자료) -	300 - 227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 - 미시적·거시적 접근 (영문 자료) -	300 - 228
신설주의 경제재건 및 지역개발 정책 (영문 자료)	300 - 229
통일 비용·수익 산정 방법론	300 - 230
미래 산업입지로서의 독일 (영문 자료)	300 - 23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9차 보고서)	300 - 232
통일독일 경제 현황 - '93년 여름 (영문 자료) -	300 - 233
신탁청 기업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3.8) -	300 - 234
대동독지역 공공부문 재정이전 현황 (1991~1994년)	300 - 235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3 추계 경제전망보고서	300 - 236
'93 추계 독일 경제 동향 (영문 자료)	300 - 237
동서독지역 소득 비교 (1990~93)	300 - 238
신탁청의 조직개편 및 재정 현황	300 - 23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4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3.12) -	300 - 241
신설주 경제의 구조적응상의 문제점	300 - 242
내독교역관련 반출·지불·신용보험	300 - 243
1993/94 동계 독일 경제 동향	300 - 244
구동독 국유부동산의 신탁청 이관	300 - 245
신탁청 조직 개편 법률(안)	300 - 246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 ('93년 12월말 현재)	300 - 247
구동독의 유산 - 냉전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 -	300 - 248
신탁청 연간 결산보고서 (1990 ~ 1992)	300 - 249
신설주에 대한 투자촉진대책	300 - 250
신탁청 임무의 자회사 이관 계획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1
신탁청 및 자회사의 직원 및 봉급 현황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2
신탁청 조직개편 및 직원, 봉급체계에 관한 연방심계원의 의견서	300 - 253
동·서 베를린간의 소득 격차	300 - 254
신연방주의 경제 상황	300 - 255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4.1) -	300 - 256
구소련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재산 반환 금지	300 - 257
신연방주 경제 및 사회통합 현황	300 - 258
신설연방주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10차 보고서)	300 - 259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4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60
신연방주 기업에 대한 공공발주 현황 보고서	300 - 261
독일의 산업입지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확충 문제	300 - 262
신연방주 산업별 생산성 분석	300 - 26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연방주 산업입지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	300 - 264
몰수재산 보상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	300 - 265
신탁청의 재정현황 (영문 자료)	300 - 266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4. 3) -	300 - 267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 ('94년 3월말 현재)	300 - 268
1993년도 동·서독 전세가격 비교	300 - 269
구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 요약 부분 -	300 - 270
신연방주의 산업 생산 현황	300 - 271
1993년도 동서독지역 경제현황 평가 - 영문 자료 -	300 - 272
신연방주의 중소기업 확충	300 - 273
'94 춘계 독일 경제 현황 및 전망 - 영문 자료 -	300 - 274
구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에 대한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전문감정서 (결론 부분)	300 - 275
'94 춘계 독일경제 현황 - 영문자료 -	300 - 276
몰수재산 반환배제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	300 - 277

〈경제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의 생산성과 경제질서 - 변천하는 동독경제 -	(번역) 300 - 1
대동독 경제지원	// 300 - 2
동독의 재산권 반환 논쟁	// 300 - 3
신탁청 정관	// 300 - 4
신탁주식회사 정관	// 300 - 5
신탁청 조직개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 300 - 6
동독 공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에 관한 법(신탁법)	// 300 - 7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전망 (켈른 독일경제연구소 전문감정 보고서 요약)	// 300 - 8
5대 경제연구소 전문감정에 비추어 본 독일통일 비용	// 300 - 9
신탁청, 동독 공유기업 정비에 총력 경주	// 300 - 10
내독경제 관계법령	// 300 - 11
미해결 재산권의 처리문제	// 300 - 12
서기 2000년까지의 통일독일 주택 전망	// 300 - 13
과거 동·서독간 통행문제	// 300 - 14
내독간 경제관계 및 그 정치적 평가	// 300 - 15
기업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안) 설명서	// 300 - 16
통독경제의 구조전환	// 300 - 17
구동독 경기부양책에 관한 보고서	// 300 - 18
의회 및 행정부 소재지 Bonn-Berlin 이전 비용	// 300 - 19
신탁청 역할의 재조명	// 300 - 20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 대응책	// 300 - 21
통일독일 농업문제	// 300 - 22
신설5개주(구동독지역)의 농업정책	// 300 - 23
통독의 희생양 : 신탁청과 암살된 Rohwedder 청장	// 3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설5개주 기업사유화의 제문제에 대한 연방경제성 산하 학술자문회의 전문감정 보고서	(번역) 300 - 25
구동독지역을 위한 올바른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노선의 지속적 추구(독일 경제5현의 특별보고서)	// 300 - 26
EC와 내독무역의 관계	// 300 - 27
EEC의 대동독관계에 비추어본 내독무역의 의의	// 300 - 28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I)	// 300 - 29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II)	// 300 - 30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III)	// 300 - 3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I)	// 300 - 32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II)	// 300 - 33
통독과 EC 통합에 즈음한 '90년대 독일 교통정책	// 300 - 34
체신통합에 관한 동·서독 체신부장관 공동성명	// 300 - 35
위기에 처한 경제통일	// 300 - 36
동독의 국가 주도 명령경제로부터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로 전환(I)	// 300 - 37
통독이후 부담의 배분을 둘러싼 투쟁	// 300 - 38
신탁청 부동산회사 개관	// 300 - 39
연구기술부문의 독일통일	// 300 - 40
신연방주내 구동독 국유재산 사유화에 관한 문답식 해설	// 300 - 41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긴급대책	// 300 - 42
화폐·경제·사회통합 2주년 각료회의 콜 수상 연설문	// 300 - 43
구 동·서독지역 최근 경기 동향(FAZ)	// 300 - 44
통일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 - 산업 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전략 -	// 300 - 45
상반된 이해관계하에 전개된 내독간 경제교류	// 300 - 46
구동독 재건 관련 콜 수상 연설문	// 300 - 47
구동독 경제의 몰락과 국가파탄	// 300 - 4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 경제의 파국적 실태	(번역) 300 - 49
구동독 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전환	// 300 - 50
신연방주 재건 지원 실무기획단 중간보고 및 건의안	// 300 - 51
통독직전 구동독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보고서 - 국가기획위 위원장의 정치국 보고서 -	// 300 - 52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	// 300 - 53
동독의 외환 획득 사업	// 300 - 54
내독간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교류	// 300 - 55
신설주 경제정책의 오류	// 300 - 56
연대협약(Solidarpakt) 합의문	// 300 - 57
'연대협약' 관련 논평 - 위협스런 협약 -	// 300 - 58
구동독 경제 및 기업경영의 통합. 적응과정(제7차 보고서)	// 300 - 59
'연대협약' 관련 논평(Ⅱ) - 놓쳐버린 좋은 기회 -	// 300 - 60
'연대협약' 관련 논평(Ⅲ) - 공동합의하에 과세부과 -	// 300 - 61
구동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	// 300 - 62
과거 몰수재산 보상법안 관련 논평 - 부당한 보상 규정 -	// 300 - 63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Ⅰ)	// 300 - 64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Ⅱ)	// 300 - 65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변형과정상의 위기 -	// 300 - 66
1995년 이후 통일비용 부담 현황	// 300 - 67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Ⅲ)	// 300 - 68
내독간 경제교류중 용역거래 절차와 유의사항	// 300 - 69
동·서독 화폐통합 - 경제적 이성보다는 정치적 결단 -	// 300 - 7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독간 경제 교류 관련 신용 대부 허가	(번역) 300 - 71
내독간 경제 교류 관련 서독 정부 보증 (Garantie)	// 300 - 72
화폐통합 3주년 관련 언론 논평 - 3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 -	// 300 - 73
독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 성장강화, 산업입지구축, 긴축재정운용 -	// 300 - 74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연방 정부의 법안 - 강연 내용 -	// 300 - 75
휘청거리는 독일 경제 - Die Zeit지 논평 -	// 300 - 76
내독간 경제협력사업의 제 유형과 절차 (유의사항)	// 300 - 77
숫자로 본 신설주 경제 현황	// 300 - 78
동·서독간 청산단위가 아닌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주요내용	// 300 - 79
구동독 기업의 민영화 - 체제전환의 핵심	// 300 - 80
몰수재산 보상법 - 수정안 및 관련 자료 -	// 300 - 81
신탁청의 딜레마 - 비생산적 파괴와 그 집행인 -	// 300 - 82
법의 도구화 - 부진한 투자활동 -	// 300 - 83
통일독일의 경제문제 진단 - 쉴러 전 경제장관의 저서 요약 -	// 300 - 84
변형이론의 현 주소 - 지금까지의 연구서 분석 -	// 300 - 85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2) - 신탁청에 의한 기업 사유화 -	// 300 - 86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3) -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 -	// 300 - 87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4)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	// 300 - 8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6) -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	// 300 - 8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8) - 구동독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	// 300 - 90
구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 관련 기사 -	// 300 - 9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의회 동독 대외무역 총괄회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 요약 부분 -	// 300 - 92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2) - 경제통합의 과정 1 -	// 300 - 93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3) - 경제통합의 과정 2 -	// 300 - 94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5) - 경제통합의 과정 3 -	// 300 - 95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7) - 경제통합의 과정 4 -	// 300 - 96

〈사 회 복 지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 과정 - 사회발전	400 - 1
//	- 사회·정치적문제
동독의 임금협상 뉴스	400 - 2
동독의 임금협상 뉴스	400 - 3
동독의 고용촉진법(90.6.28 제정, 1차 국가조약안 후속법령)	400 - 4
동·서독 통합이후 동독지역의 실업재정 및 사회보험 운영현황 (요약)	400 - 5
사회보험에 관한 법	400 - 6
기존연금의 서독수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기타규정(연금조정법)	400 - 7
제1차 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사회통합 관련)	400 - 8
동·서독 경제·노동상황(7월)	400 - 9
노동분쟁 중재기관의 설립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독문, 번역본)	400 - 10
통독후의 단체교섭 등으로 동독 경제력 악화	400 - 11
공공서비스, 수송·교통노조 파업 예고 (8.28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2
동독 9만 공공서비스 종사자 경고파업 (8.30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3
동독, 최고 15만명의 도제필요(8.24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4
동독 의료보험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의료급여 예정 (요약번역, 원문)	400 - 15
동독 공직근로자 매월 200 DM 임금인상(요약번역, 원문)	400 - 16
독일 노총의 단체협약 체결현황 보고(목차번역, 원문)	400 - 17
동독·서독 근로자 임금실태(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8
광산에너지 노조, 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확장 계획 (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9
동독의 노동시장 상반기 동향(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0
동독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불확실(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에너지 공급의 생태학적 근대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400 - 22
동독 노총 해체(신문 요약번역)	400 - 23
서독 상업은행·보험조노 300 DM 이상 임금인상 요구 (신문 요약번역)	400 - 24
동독 경제 및 사회질서 개편후 사회보장정책적 과제 (논문 요약번역, 원문)	400 - 25
동독 청소년기관 설치법(목차번역, 독어원본)	400 - 26
취업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7
장애자 고용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8
서독지역 실업감소, 동독지역 실업증가(신문기사 요약번역, 원문)	400 - 29
고용창출 조치령(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30
임금수준의 지역적 차이(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1
철강산업 단체교섭 어려울 것으로 예상(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2
직업훈련의 개별적 촉진에 관한 지침(독어원문, 목차번역)	400 - 33
동독발행 신분증(여권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외무성 회람 (독어원문, 영문번역)	400 - 34
동·서독 노동시장 동향 격차심화(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5
동독지역에 약 1,729천명의 단축근로자 존재(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6
독·쏘간 노동·사회분야 협력협정(당관 영문번역)	400 - 37
동·서독 노조통합 과정(번역요약, 독어원문)	400 - 38
서독의 신설 5개주에 대한 환경보호 지원(영문)	400 - 39
동·서독 노동시장 상반된 추이 여전히 계속 (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400 - 40
연방고용청 '90 독일 고용실태 분석(요약)	400 - 41
독일정부의 대 동독지역 실업대책(요약)	400 - 42
'91.1월 고용상황	400 - 43
신설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	400 - 4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을 전후한('90) 구동독지역 실업현황 및 대책			400 - 45
신설5개주 환경정화문제			400 - 46
동·서독 노총의 통합에 따른 문제			400 - 47
통독후 통합 “연금법” 제정을 위한 해결과제			400 - 48
통합조약중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400 - 49
신설5개주 보건·의료체계 확립 문제			400 - 50
통독후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대책			400 - 51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서독 연금법의 동독 적용			400 - 52
동구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400 - 53
전환기에 처한 노동시장			400 - 54
동독의 단체협약 발전추이			400 - 55
연금개정 내용('92)			400 - 56
구동독지역 실업대책으로서의 신탁청의 사회복지 계획			400 - 57
구동독지역 여성실업자 고용창출 대책			400 - 58
구동독지역에의 아동·청소년 부조법의 도입			400 - 59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에의 의사법 도입			400 - 60
구동독기관 종사자들의 이전근무기간 인정 합의			400 - 61
“투자장애 제거법” 상의 구동독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설명서			400 - 62
사회부조(Sozialhilfe) : 신설연방주 주민에 대한 해설 책자			400 - 63
가족정책(동독지역 가정에 대한 급부)			400 - 64
동·서독 적십자사 통합 관련			400 - 65
과거 내독간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과 활동			400 - 66
구동독 환경오염 잔재 청산 책임 소재			400 - 67
통독후 구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노동자 이동현황			400 - 68
통독후 실업증가 원인과 대책			400 - 6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새로운 노조의 형성과 임금협상 자치권	400 - 70
구동독지역 노동시장 변동 추세	400 - 71
통독과정에서의 노조정책	400 - 72
고용시장과 고용정책	400 - 73
통독과정에서의 여성문제 논쟁	400 - 74
구동독 변혁과정에서의 적용에 따르는 비용	400 - 75
사회적 통합정책상의 계수단과 문제점	400 - 76
최근 독일 노동시장 동향	400 - 77
구 동·서독 가족·부녀·아동 분야 사회복지 혜택 비교	400 - 78
구 동·서독 사회보장정책 제규정 비교 (연방정치교육센터 발간자료)	400 - 79
구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내독관계성 발간자료)	400 - 80
과거 양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400 - 81
신설주에 대한 환경복구정책	400 - 82
과거 양독간 보건협정 구체화를 위한 서독정부 시행령	400 - 83
내독관계성과 독일적십자사간에 체결된 내독간 환자운송에 관한 협약	400 - 84
구동독 피난민 정착·지원 문제	400 - 85
구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및 개정법 원문	400 - 86
구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시행령 및 개정령 원문	400 - 87
구동독지역 노동행정체계 구축 현황	400 - 88
구동독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법 개정	400 - 89
통독이후 복지 향상 실태	400 - 90
통독과 여성문제	400 - 91
신설주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지위	400 - 92
내독간 상속재산의 반입·반출	400 - 93
통일독일의 주택정책	400 - 9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400 - 95
내독간 사채. 유골의 반입. 반출	400 - 96
내독관계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이 가능한 의약품	400 - 97
내독간 보건 분야 교류·협력	400 - 98
화폐통합이후 3년간 노동시장 동향 (영문 자료)	400 - 99
신설주의 실업자 취업 지원	400 - 100
통일독일의 사회정책적 문제	400 - 101
통일 전후 동독지역 보건·사회 시설	400 - 102
구동독지역 재활원 시설 및 구조	400 - 103
동·서독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400 - 104
동·서독 주민대상 평등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400 - 105
통일독일의 실업문제	400 - 106
신설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400 - 107
구동독지역의 직업교육 기회	400 - 108
신연방주의 사회법	400 - 109
신연방주의 가전제품 보유에 관한 여론조사	400 - 110
신연방주의 고용촉진대책	400 - 111
동·서독지역 사회보장 예산	400 - 112
신연방주 실업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	400 - 113
1993년 산업별 임금협약 체결 현황	400 - 114
신연방주의 사회정책적 재건 현황	400 - 115

〈사회복지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환경보호문제 - 양독간 환경통합달성 -	(번역) 400 - 1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정책	// 400 - 2
신설 5개주 실업현황과 대책	// 400 - 3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탈출자들의 서독 정착에 관한 지침서 ('91.1 기준)	// 400 - 4
피난과 출국의 동·서독 이주 40년사	// 400 - 5
신설 연방주(구동독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 400 - 6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 구동독지역 통독후 1년 결산 -	// 400 - 7
구동독 주택의 구체 청산 문제	// 400 - 8
분단시 동·서독 사회복지 체계·수준 비교	// 400 - 9
동서독 노조 통합 과정	// 400 - 10

〈교육분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 교육위원회 구성	500 - 1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교육제도 발전)	500 - 2
동·서독 학제 대비표	500 - 3
통독대비 교육예산 증액	500 - 4
향후 통독일정과 관련한 교육정책 보고	500 - 5
교육제도의 현상과 현안 문제점	500 - 6
동서독 연구 및 학문 공동발전 전망(관계자료)	500 - 7
90년 신학기 동독교육계 현황	500 - 8
동독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	500 - 9
독일 고등교육 2,000년대(장관 기초연설내용 요약 보고)	500 - 10
동·서독 체육통합계획	500 - 11
동·서독간 체육교류현황	500 - 12
동독 각정당의 학교제도에 관한 견해(요약번역, 원문)	500 - 13
교과서 없는 동독학생들(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500 - 14
동독의 스포츠를 인수하는 댓가(신문기사 원문)	500 - 15
독일 청소년 자연보호연구 현상모집 공고(요약번역, 원문)	500 - 16
독일 및 유럽통합과 직업교육정책(요약번역, 원문)	500 - 17
공산주의 이론 연구자에 대한 지원금지조치(요약번역, 원문)	500 - 18
주재국 교육정책의 변화(각급학교 수업연한 단축) (번역요약문 및 원문)	500 - 19
동독 공산당법 폐지후 교육관련자료(번역요약문 및 원본)	500 - 20
동·서독 교육위원회 최종합의사항(요약번역)	500 - 21
주재국 교육계 동향보고(통독 및 EC 통합을 중심으로)	500 - 22
통독후 신설5개주 교육개혁안	500 - 23
제250차 주문교상 및 교육자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5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체육통합 계획			500 - 25
신설 5개주 전산교육 강화(국문요약번역, 독어원문)			500 - 26
통일독일의 대학교육정책			500 - 27
동·서독간 학술연구 통합과정(독어원문)			500 - 28
90년대의 교육정책 전망(직업교육관계)			500 - 29
통독연구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경향(독어원문)			500 - 30
올림픽을 향하여 - 독일스포츠 발전사 - (독어원문)			500 - 31
동·서독간 체육교류를 위한 의정서			500 - 32
구동독 대학의 잔재청산(Abwicklung) 관련 논쟁			500 - 33
신설5개주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			500 - 34
통독이후 교육예산의 증가			500 - 35
독일 동부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진흥방안			500 - 36
구동독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과 통독이후 영향			500 - 37
통독이후 독일의 학교 : 구 동·서독간 상이점 극복방안			500 - 38
신연방 5개주 교과서 부족			500 - 39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일반학교의 새로운 구성			500 - 40
동독학교 교육의 2가지 실패요인			500 - 41
구동독지역 대학 학과(시설) 폐지 및 신설			500 - 42
통독이후 구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적응현황			500 - 43
동·서독 청소년 단체간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서('82. 9. 20)			500 - 44
양독간 청소년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89. 9. 1)			500 - 45
신설주(구동독지역) 교육과 학문분야 장려조치(설명자료)			500 - 46
구동독지역에서의 역사학 재정립			500 - 47
구동독 체제하에서의 역사학 비판			500 - 48
동·서독간 심리적 시련			500 - 49
통독과정에서의 교육분야			500 - 5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역사의 재평가	500 - 51
동·서독 청소년 교류	500 - 52
동·서독간 청소년단체 접촉사례	500 - 53
구동독 청소년들의 극우화 경향 분석	500 - 54
구동독지역의 청소년 보호실태 - 라이프찌히 사례 중심 -	500 - 55
양독간 청소년 교류문제 관련 담당자 면담록	500 - 56
구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향 -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500 - 57
통독후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관과 미래관	500 - 58
통일독일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인생관	500 - 59
구동·서독지역 어린이들의 교외생활 비교	500 - 60
서독 정부의 청소년·학생을 위한 내독간 견학여행 장려 대책	500 - 61
동·서독 지역주의 교사 현황	500 - 62
통독 전후 동독지역 대학 실태	500 - 63

<교육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과학·기술 협정	(번역) 500 - 1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 500 - 2
신설5개주 정치교육의 출발점	// 500 - 3
동·서독 체육통합에 따르는 제문제	// 500 - 4
신설5개주의 대학교육 개혁안('91~'95)	// 500 - 5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점	// 500 - 6
내독간 과학·기술 협력 가능성과 한계	// 500 - 7

〈문 화 · 종 교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 문화교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600 - 1
동독 변혁이후의 카톨릭 교회(독어논문)	600 - 2
독일 분단·통일과 언어 이질화 문제	600 - 3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문화예술 지원	600 - 4
동·서독 문화분야 통합현황	600 - 5
구동독 문화분야 재건을 위한 구체적 지원조치	600 - 6
Stasi와 구동독 공산당의 교회정책	600 - 7
교회의 Stasi 청산작업	600 - 8
통독과정에서의 문화분야	600 - 9
내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례 - 구동독 주민 면담록 -	600 - 10
통독후 동독주민의 정신적 전환문제	600 - 11
내독관계에서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 반출	600 - 12
내독간 문화교류(Ⅰ)	600 - 13
내독간 문화교류(Ⅱ)	600 - 14
신설주의 문화 및 문화정책 -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	600 - 15
신설주의 문화 구조 변화	600 - 16
구동독 지식인의 반체제활동과 문화	600 - 17
구동독 구교 교회와 Stasi	600 - 18
신교 교회와 구동독 공산당-국가	600 - 19
동·서독의 공동성장 문제	600 - 20
통일독일의 심리적 격차	600 - 21
구동독 교회의 정치적 영향과 Stasi	600 - 22

〈문화·종교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슬픔이 없는 민족 (구동독 작가 Rolf Schneider의 지식인으로서 체험)	(번역) 600 - 1
동·서독간 문화교류	// 600 - 2
구 동독의 문화정책	// 600 - 3
동·서독간 문화협정	// 600 - 4
동·서독간 신교통합	// 600 - 5
과거 서독교회의 대 동독지원	// 600 - 6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 600 - 7
제7회 한·독교회협의회회의 공동성명 ('93.5.2~7, Bad Saarow)	// 600 - 8
동서독 교회의 통합과 문제점	// 600 - 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1) - 문화, 언론, 스포츠 -	// 600 - 10

〈언론분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언론매체	700 - 1
서독 공보처의 통독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계획(관계문서)	700 - 2
독일 언론재편(요약번역, 원문)	700 - 3
언론의 지방분권화(논문 요약번역, 원문)	700 - 4
통독후 이전동독지역 언론현황(독어원문)	700 - 5
통독관련 독일방송 재편현황(요약번역, 독어원문)	700 - 6
통독관련 독일언론 상황보고	700 - 7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소개 홍보용 책자 (책자개요번역, 원문책자)	700 - 8
신설 5개주(이전동독지역) 방송자문위원회 구성	700 - 9
독일 방송제도 개편	700 - 10
독일 방송제도 연구	700 - 11
구동독 신문·잡지의 재편	700 - 12
독일통일 전후 언론·방송 홍보정책	700 - 13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700 - 14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대서방 언론 평가	700 - 15
구동독지역의 공영방송체계 확립현황	700 - 16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Ⅱ)	700 - 17
동·서독 통신분야 통합과정 및 현황	700 - 18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Ⅲ)	700 - 19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700 - 20
내독간 언론인들의 활동 보장	700 - 21
통독직전 동독주민들의 서독 라디오·TV 시청 현황	700 - 22
내독간 통신교류 관련 구동독의 법률 목적	700 - 23
통독과정에서 라디오·TV의 역할 (영문 자료)	700 - 24

〈언론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의 대중매체 정책과 구서독측으로부터의 영향			(번역) 700 - 1
구 동독인들의 구서독 라디오·TV 이용 현황			// 700 - 2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I)			// 700 - 3

〈기 타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위기로부터의 발전(I 및 II)	800 - 1
신설 연방주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정보(120개 문답식 소책자)	800 - 2
독일 통일과정(연대기별 사건중심, 독어원문)	800 - 3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	800 - 4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91. 5. 13 Spiegel)	800 - 5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Spiegel지 7. 22~29자)	800 - 6
연방내무성이 실시한 구동독지역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00 - 7
통독 1주년 관련 언론보도, 각계반응	800 - 8
통독이후 1년간 각 분야별 통합 현황	800 - 9
통합조약(Einigungsvertrag) 본문 및 의정서 영문판	800 - 10
동·서독지역 대학생들의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800 - 11
통일대비 특별정책 연수 주제강연 내용(요약)	800 - 12
“독일통일 소사전”(Handwoerterbuch der Deutschen Einheit) : 연방정치교육센터 발행 책자	800 - 13
전독문제연구소 '69~'91 활동보고서	800 - 14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Der Spiegel 지 '92. 4. 27자)	800 - 15
신설주(구동독지역)에서의 보수우파(CSU와 DSU) 득표 가능성	800 - 16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800 - 17
구동독의 대변력과 독일통일에 관한 참고도서 소개	800 - 18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 연표 및 참고문헌	800 - 19
한민족 통일여성 재독일협의회 주최 통일강연 및 토론회 (내용요약)	800 - 20
연도별 내독관계성 예산(1949~1990)	800 - 21
구동독의 감사제도	800 - 22
통독과정 주간동향('92. 7. 13~7. 19)	800 - 2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	주간동향		800 - 24
독일통일이	재정감사에 미친 영향		800 - 25
독일	연방감사원 현황		800 - 26
최근	통독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27
통독과정	주요동향('92. 7.27~ 8. 2)		800 - 28
통독	2주년 각 분야 통합현황		800 - 29
통독과정	주간동향('92. 9.24~ 9.30)		800 - 30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1~10. 7)		800 - 31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8~10.14)		800 - 32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15~10.21)		800 - 33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2~10.28)		800 - 34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9~11. 4)		800 - 35
통독	2주년을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		800 - 36
통독과정	주간동향('92.11. 5~11.11)		800 - 37
독·한	협회 주최 통일문제 심포지움 결과 보고		800 - 38
서독	내독관계성 주요사업 예산 내역		800 - 3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1~ 1. 6)		800 - 4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 7~ 1.13)		800 - 41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 '93.1.18자 Der Spiegel 지 -		800 - 4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14~ 1.20)		800 - 4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1~ 1.27)		800 - 4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8~ 2. 3)		800 - 4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 4~ 2.10)		800 - 4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1~ 2.17)		800 - 4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8~ 2.24)		800 - 4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호네커 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4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 25~ 3. 3)	800 - 5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4~ 3. 10)	800 - 5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11~ 3. 18)	800 - 5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19~ 3. 26)	800 - 5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27~ 4. 4)	800 - 5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5~ 4. 11)	800 - 5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12~ 4. 18)	800 - 5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19~ 4. 25)	800 - 5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26~ 5. 2)	800 - 5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3~ 5. 9)	800 - 59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중부유럽과 동아시아 변혁과정 (세미나 결과보고)	800 - 6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10~ 5. 16)	800 - 6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17~ 5. 23)	800 - 6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24~ 5. 30)	800 - 6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31~ 6. 6)	800 - 6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7~ 6. 13)	800 - 6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14~ 6. 20)	800 - 6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21~ 6. 27)	800 - 6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28~ 7. 4)	800 - 6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5~ 7. 11)	800 - 6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12~ 7. 18)	800 - 7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19~ 7. 25)	800 - 71
한반도 통일과정상의 문제점 - 한·독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 논문 -	800 - 7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26~ 8. 1)	800 - 7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 2~ 8.15)	800 - 7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16~ 8.29)	800 - 7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30~ 9.12)	800 - 7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9.13~ 9.19)	800 - 77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800 - 78
독일 통일 소사전	800 - 79
「독일 통일과 신설연방주 (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800 - 80
「독일 통일과 신설연방주 (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정본)	800 - 8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실적 - 제4차 보고서 -	800 - 82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800 - 83
독일인들의 불안요인에 관한 여론 조사	800 - 84

〈기타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 여론조사 결과(동·서독 독일인을 묶는것과 가르는것)			(번역) 800 - 1
통독 1주년 보고서(I)			// 800 - 2
통독 1주년 보고서(II)			// 800 - 3
슈미트 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			// 800 - 4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방문 세부일정			// 800 - 5
최근 구 동·서독지역 지도층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			// 800 - 6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 구동독 지역 지원 현황 -			// 800 - 7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통합 문제 - Allensbach 여론 조사 결과 -			// 800 - 8
바이체커 대통령 통독 3주년 기념사			// 800 - 9
콜 수상 통독 3주년 기념사			// 800 - 10
통독 3주년 관련 언론 반응 (I) - 주요 일간지 사설 -			// 800 - 11
통독 3주년 여론조사 결과			// 800 - 12
통독 3주년 관련 언론 반응 (II) - Der Spiegel 지 -			// 800 - 13
「독일 통일과 신설연방주 (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목차			// 800 - 14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 - 독일 통일 과정 -			// 800 - 15
바이체커 대통령 퇴임 기자 회견 - 독일 통일 관련 부분 -			// 800 - 16

통독연구 업무체제 강화이전 송부자료

< 90. 6. 15 - 7. 13 송부 >

1. 1970. 8. 12 독·쏘간 조약(모스크바 조약) (독정720-52, 90. 6. 15)
2. 항공협정(1971. 11. 11) (//)
3.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1972. 7. 5) (//)
4. 문화협력협정(1973. 5. 19) (//)
5. 이종과세방지협정(1981. 11. 24) (//)
6. 과학기술 협력협정(1986. 7. 22) (//)
7. 원자력 평화적 이용 관련 과학기술 약정(1986. 7. 22) (//)
8. 보건 및 의료과학 협력 약정(1986. 7. 22)
9. 농업 연구분야 협력 약정(1986. 7. 22)
10. 환경보호 분야 협력 협정(1988. 10. 25)
11. 핵사고 조기통보 및 핵시설 관련 정보교환(1988. 10. 25) (//)
12. 영해밖 해상사고 방지 협정(1988. 10. 25)
13. 대기권의 평화목적 사용 및 연구분야 협력약정(1988. 10. 25) (//)
14. 식료품 분야 기관간의 협력증진 약정(1988. 10. 25) (//)
15.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 협정(1989. 6. 13) (//)
16. 과학 및 상급학교 분야 협력증진 협정(1989. 6. 13) (//)
17. 문화센터 설치 및 활동에 관한 협정(1989. 6. 13) (//)
18. 학생교사 교환 협정(1989. 6. 13) (//)
19. 장애인 재활 관련 협정(1989. 6. 13) (//)
20. 마약 남용 방지 협력 협정(1989. 6. 13) (//)
21. 청소년 교류 협정(1989. 6. 13) (//)
22. 경제전문가 및 경영자 교육 협정(1989. 6. 13) (//)
23. 동서독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독정700-501, 90. 5. 18)
24. 동독 정부기관 관련자료 (독정700-552, 90. 6. 8)
25.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이후 동독지역에 도입되는 제도 (노동, 사회보장부분) (주독노 762-666, 90. 7. 13)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

印 刷 : 1994. 10. 8

發 行 : 1994. 10. 10

發行處 : 統一院 統一政策室
第 2 政策官室

Tel : 720-2148

725-0762

〈비매품〉